

한미FTA 협상에 따른 전북산업영향 및 대응방안

2007. 3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방법	4
제2장 한미FTA 배경 및 협상요약	7
제1절 한미FTA 추진배경 및 목적	7
1. 추진배경	7
2. 추진 목적	9
제2절 통상현안 및 협상 경과	12
1.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12
2. 협상진행 과정과 주요쟁점	15
제3절 협상의 성공 및 실패요인	28
1. 성공요인	28
2. 실패(방해)요인	28
제3장 지역산업 파급효과	33
제1절 전북 산업 및 무역구조	33
제2절 농업 부문 영향	48
제3절 제조업 부문 영향	57
1. 전북 제조업 산업구조	57
2. 전북 제조업 교역구조	62
제4절 서비스업 부문 영향	80
제4장 산업별 대응방안	99
제1절 농업 부문 대응방안	99
1. 피해구제 대책	99
2. 대응방안	100
제2절 제조업 부문 대응방안	108
1. 피해구제대책	108
2. 대응방안	109
제3절 서비스업 부문 대응방안	112

표 목 차

<표 2-1> 한국의 FTA체결 현황 8

<표 2-2> 한국의 대미 주요 교역 품목 10

<표 2-3> 2006년도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12

<표 2-4> 한미 4대 통상현안 13

<표 2-5> 미국의 주요 무역투자장벽 14

<표 2-6> 한·미 FTA로 인한 주요 피해분야와 정부의 보완대책 16

<표 3-1> 전북의 지역내총생산 33

<표 3-2>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부가가치 기준) 33

<표 3-3> 전북의 주요산업 비중 34

<표 3-4> 지역별 수출입 현황 35

<표 3-5> 전북 수출입 현황 36

<표 3-6> 전북의 주요 수출국 36

<표 3-7> 전북의 주요 수입국 37

<표 3-8> 주요 국가별 전북 수출입 현황 37

<표 3-9> 전북 산업별 수출입 현황 38

<표 3-10> 전북 품목별(대분류) 수출입 현황 39

<표 3-11> 전북의 주요 수출 품목(중분류) 39

<표 3-12> 전북의 주요 수입 품목(중분류) 40

<표 3-13> 전북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중분류) 41

<표 3-14> 전북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중분류) 41

<표 3-15> 전북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세분류) 42

<표 3-16> 전북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세분류) 42

<표 3-17> 전북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세세분류) 43

<표 3-18> 전북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세세분류) 43

<표 3-19> 전북 시군별 산업구조(종사자수) 45

<표 3-20> 시군별 산업 입지상 계수 (종사자수 기준) 46

<표 3-21> 시·군별 수출액 및 주요품목 47

<표 3-22> 미국이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순위와 주요 품목(2004) 48

<표 3-23> 미국의 10대 수출·입 농산물(2003) 49

<표 3-24> 한국의 대미 농산물 교역현황 49

<표 3-25>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 50

<표 3-26> 전북의 농업 지표 추이 51

<표 3-27> 한미FTA의 시나리오별 농업생산 피해규모 52

<표 3-28> 분석 시나리오(KREI) 53

<표 3-29> 한·미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53
<표 3-30>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액 감소 순위(국내)	54
<표 3-31> 전북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55
<표 3-32> 전북의 주요 농산물 생산 감소액	56
<표 3-33> 전북 제조업의 부문별 현황	57
<표 3-34> 전북 제조업종별 현황(2005년)	58
<표 3-35> 전북 제조업종별 입지상(특화계수) 변화 추이	59
<표 3-36> 전북 시군별 제조업 입지상 계수(종사자수 기준)	60
<표 3-37> 전북의 제조업 특화 업종	61
<표 3-38> 한미 품목별 교역 구조	62
<표 3-39> 양국의 주요 제조업별 관세율 수준	63
<표 3-40> 관세율 수준별 제조업의 분포	63
<표 3-41> 한미 FTA 체결시 제조업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66
<표 3-42> 한미FTA 제조업의 경제적 효과	66
<표 3-43> 전북 제조업의 경제적 효과	67
<표 3-44> 한미FTA의 제조업 주요 업종별 영향	68
<표 3-45> 전북 제조업종별 현황(전북대비)	70
<표 3-46> 미국의 초고관세(20%초과) 적용품목 현황	72
<표 3-47> 서비스업 업종별 특징	80
<표 3-48> 국내 서비스산업 총산출 현황	82
<표 3-49> 한미 서비스 무역 동향	84
<표 3-50> 전북의 서비스 산업 현황	86
<표 3-51> 전북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 변화추이	86
<표 3-52> 한·미 FTA의 서비스부문 경제적 효과	87
<표 3-53> 전북 서비스부문 경제적 효과	88

그림 목 차

<그림 3-1> 서비스업 GDP 비중 및 성장률 추이 (1990~2004년)	81
--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국가임
- 1995년 WTO 출범 이후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라는 기치 아래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이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 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 체제에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발효 중인(2006년 7월 현재) 197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WTO 출범(1995)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147개에 이르고 있음
- 한·미 FTA는 2006년 2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07년 3월 8 - 12일 제8차 본 협상을 마치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으로 최고위급 협상이 진행중임
- 한·미 FTA는 한 - 싱가포르 FTA, 한 - 칠레 FTA, 한 - 유럽자유무역연합 등과 달리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의 핵심이 단순히 통상확대나 자유화 보다도 국내의 각종 규제 완화와 지식정보 및 서비스 산업으로의 신성장동력의 재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협상의 효과는 다양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별로 산업구조, 지역특화, 지역간 산업간 연관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따라서 한미 FTA협상이 전북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는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에 갖고 추진됨
 - 첫째, 한미 FTA협상이 전북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파악함. 특히 농업을 비롯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를 분석함

- 둘째,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방법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8차에 걸친 한·미 FTA협상의 추진과정과 협상에서 다루어진 협상 내용을 검토함
- 3장에서는 한미 FTA 협상이 전북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분석하도록 함. 산업부문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파악하되,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확정된 협상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의 경우 쌀이 협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도록 함.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여 그 영향을 예측함. 서비스 협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부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국과 미국간 개방의 기본원칙에 관해 큰 이견이 없는 사업서비스의 경우 일부 세부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방된다고 가정하고 공공서비스 부문은 개방의 영향 하에 놓인다고 가정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
- 제 4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에 따라 전북 지역경제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다루기로 함

제3절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발간한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추진함
- 한·미 FTA협상으로 인한 전북지역산업에의 영향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초로 농업부문, 제조업부문, 서비스업 등 전북산업의 비중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음

한미FTA 배경 및 협상요약

II

- 1 한미FTA 추진배경 및 목적
- 2 통상현안 및 협상 경과
- 3 협상의 성공 및 실패요인

제2장 한미FTA 배경 및 협상요약

제1절 한미FTA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세계경제의 개방 가속화

-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구 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에의 통합, WTO 다자간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지역주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되고 글로벌화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품·자본·기술·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추진되고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 도래
- 결국 일국의 국가경제발전은 어떻게 글로벌화에 잘 대응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음

■ 최근의 다자주의 정체 및 지역주의 가속화

- UR이후 새로운 다자간협상인 WTO/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2001년 Doha에서 개최(4차 WTO각료회의)됨으로써 농업·서비스 외 비농산물 추가개방·지적재산권·무역규제(반덤핑·보조금)·환경·분쟁해결 등 7개 의제가 설정되어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그 후 계속 결렬

※ DDA협상의 결렬 이유

- 칸쿤각료회의 (2003. 9, 제5차 WTO각료회의) 결렬
 - 농업분야 및 이른 바 Singapore Issues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로 합의 실패
- 홍콩각료회의 (2005. 12, 제6차 WTO각료회의) 결렬
 - 구체적 합의에 실패하고 향후 Momentum유지 차원에서 선언문만 채택 (당초 협상시한인 2005년 12월은 넘김)
- 주된 합의실패이유는 농업분야 등에서 회원국간 이견, WTO의 합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구조, 지역주의 확산, 브라질·중국·인도 등 개도국

그룹의 목소리가 커진 점 등으로 볼 수 있음

- 다자간 협상인 WTO/DDA 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근년에 와서 지역무역협정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이 급증되고 있음
 - 전체 193건 중 102건이 2000년 이후 체결 (63%가 FTA협정)
- 최근 FTA 추세 및 경향
 - 상대국 선정측면에서 지역개념 초월, 지역 횡단적 체결 증가(미·싱가포르 등)
 -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적인 FTA대열에 동참을 주저해 왔던 동아시아 국가, 서남아시아 국가 등도 FTA체결에 전력 투구 중
 - 포괄적 FTA를 지향함과 동시에 WTO와 같은 다자간 통상규범보다 진전된 자유화(WTO+)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 (다만 분야별 순차적 개방방식 선호)
 - 산업별 타겟시장을 겨냥한 FTA증가(일본 : 자동차시장을 겨냥한 태국과의 FTA 등)
 -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전략적 FTA 증가 (중·아세안 => 한·아세안)

<표 2-1> 한국의 FTA체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체결국(4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 - 2004. 4월 발효 ● 싱가포르 - 2006. 3월 발효 ● EFTA - 2005. 12월 서명 (국회비준예정) ● ASEAN - 2006. 4월 상품무역협정 타결 (쌀협상에 반대한 태국 제외 9개국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추진대상국 (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2006. 6월 1차협상 개시(진행중) ● 일본 - 2004. 11월까지 6차례 협상 (일본측 농산물 시장개방 의지 미흡으로 협상중단상태) ● 캐나다 - 4차 기초협상 완료 (기초협상 진행중) ● 인도 - 2006. 3월 CEPA(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추진 대상국 (33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 한중일 FTA ● 공동연구 - 러시아, MERCOSUR 남미 공동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FTA체결 희망국 (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 페루, 파나마, 뉴질랜드, 호주

2. 추진 목적

1) 이론적 측면에서의 FTA추진 효과

<p><u>경쟁을 통한 혁신과 효율화</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구조가 유사한 나라들 사이에 FTA가 체결되면 양국의 각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산업내에서 혁신과 효율화가 이루어짐 • 그 결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담당하던 기존의 수출입이 상대국의 우위 업체들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함. 	<p><u>거래비용 감소효과</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상대국이 FTA회원국이 아닐 경우 수출구조가 유사해 경쟁이 이루어지더라도 관세, 무역장벽 등의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경쟁업체들 간의 생산성 차이가 이 거래비용보다 크지 않으면 수출입 대체가 발생하지 않음. • FTA체결로 이와 같은 거래비용을 낮추면 약간의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도 수출입대체가 발생하게 됨.
<p><u>기술 및 지식의 확산 효과</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기술 이전이나 투자 증가에 따른 기술 및 지식의 확산(spillover)과 이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는 경쟁적인 업종일수록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경쟁적인 업종일수록 경쟁 업체들의 기술 개방 동향과 경영혁신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임. • 이와 같은 watching&following과정을 통해 기술과 지식의 확산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역할분담에 따른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함. 	<p><u>노동비용 격차효과</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조가 유사하면서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두 나라 사이에 FTA가 체결될 경우, 거래비용이 낮아지면서 노동비용의 영향력이 커지게 됨. • 그 결과 노동비용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생산시설이 이전되거나 임금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게 되어 양국 간 교역이 늘어나게 됨. • 단, 이 효과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제고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자본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2) 한국 입장에서 보는 대미 FTA추진 목적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교역규모가 GDP의 70%이상 (2005년 기준 수출입 비중이 GDP의 73.8%)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큰 부분은 대외교역에 의존
- 한미 FTA추진의 필요성
 - 단기적으로는 대미무역수지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51억 달러에서 11억 달러)이나 다음과 같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①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지속성장 토대 구축
 -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기반 마련
 - 그 동안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 계속 하락
 - 한국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 1998년 4.6%, 1998년 2.6%, 2001년 3.1%, 2005년 2.6%

- 대미수출증가율(2005.10월현재) : 한국 - 5.0%, 일본 7.2%, 중국 25.7%, 대만 0.7%, 인도 19.2%
-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원천 생산기술) 및 높은 “산업내 무역”으로 양국 간 교역 및 산업협력(R&D, 자본) 확대
- 관세 등 거래비용의 감소
- 통상마찰의 완화

<표 2-2> 한국의 대미 주요 교역 품목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품목	금 액	비중	수입품목	금 액	비중
자동차	10,148	23.7	반도체	5,892	20.5
무선통신기기	7,948	18.5	반도체 제조용 장비	1,646	5.7
반도체	4,622	10.8	항공기 부품	1,178	4.1
컴퓨터	1,919	4.5	곡실류	992	3.4
의류	1,544	3.6	계측제어분석기	904	3.1
영상기기	1,240	2.9	식물성 물질	873	3.0
자동차부품	1,143	2.7	합금철선철·고철	829	2.9
석유제품	887	2.1	기초유분	724	2.5
철강판	701	1.6	컴퓨터	701	2.4

②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 확대

- 경제 ·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하여 대외신인도 향상

(대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투자 증대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 -> 해외차입 활성화 -> 국내투자 확대 효과 발생)

③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 FTA대상국 중 최대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미국 비교우위요소 중 outsourcing이 가능한 핵심생산공정, R&D, 제조서비스 부문등의 점진적인 한국으로의 이관이 전망 됨.
- 서비스시장 개방과 경쟁력 강화대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강한 서비스산업” 보유 가능

④ 경제 · 사회 시스템 선진화 계기

- Global Standard 정착

-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2000년 현재 서비스생산성 : 한국 100, 미국 219.2, 일본 195.4, 프랑스 199.9)
- ⑤ 동북아비즈니스 중심 및 동아시아 FTA 허브 구축
 - 동북아에서 미국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본부 설립 추진
 - 한미 FTA, 한 · ASEAN FTA 조기 완성으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 가능성 증대
- ⑥ 외교 · 안보적 측면의 효과
 -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증대 되어 한미동맹관계 공고화
 - 동북아 질서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3) 미국입장에서 본 한미 FTA 추진 목적

- ①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
 - 한국은 미국의 세계 7대 교역국, 동아시아 3대 교역국
 - 미국으로서는 한미 FTA가 1994년 NAFTA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무역협정임
- ② 미국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한국시장투자진출 확대
- ③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교두보 확보
(일본, 중국을 포함한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Domino Effect 발생)
- ④ 국제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아시아지역내 중국의 경제적 · 정치적 영향력 확대 저지 (외교 · 안보적 이유)
- ⑤ 한국과의 4대 통상현안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자동차배출가스 기준, 위약품) 해결
- ⑥ 미국의회 및 업계으로부터의 적극적 지지

제2절 통상현안 및 협상 경과

1.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1) 최근 미국이 지적하는 한국의 무역투자장벽

- 지난 2006년 초부터 미국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무역투자장벽 제거를 위해 매우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공세를 펼치기 시작하였음. 이는 그 동안 한국정부가 WTO 출범에 맞춰 적극적으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미국으로서도 그 점을 인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어 버린 셈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음
- 최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관련 공세내용은 USTR의 2006년도 무역장벽 보고서(NTE) 한국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음

<표 2-3> 2006년도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수입정책	·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인하 필요성 제기 · 2005년 쌀협상 타결 이후 한국의 의무 이행상황 점검 필요성 제기	
수입기준· 검사	· 과도한 위생검역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뼈 포함 쇠고기 수입 재개 계속 요구 예정	
정부조달	· 지방정부의 건설서비스 분야 양어하한선 하향조정 필요성 제기	
수출보조금	· WTO 및 OECD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 -반도체, 통신 장비 등 수출지향적인 차세대 산업 육성 중 · 하이닉스, 제지산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	
지식재산권	·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 조치,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의 책임 강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필요성 제기	
서비스	· 지상파 및 케이블 TV 외국 프로그램 방송 비율 및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필요성 제기 · 한국 정부의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안 언급 · 우체국 보험에 대한 특혜 시정 필요성 제기 · 외국계 은행 지사들의 대출 한도 결정시 분점자본금 인정 필요성 제기	
투자장벽	·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 제기 · 국영기업, 위성 및 케이블 방송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필요성 제기	
전자상거래	·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국경 간 정보교류 제약 가능성 제기	
기 타 장 벽	투명성 자동차	· 농산물, 의약품, 통신, 자동차, 금융 분야 등의 투명성 제고 필요 · 자동차 관세 인하, 세제 단순화 및 세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의약품	·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 산정 개선 필요성 제기 · 약가 재평가 제도에 대한 우려 제기
장 벽	통신	· 민간 통신 사업자의 기술 선택 관련, 정부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 제기 -정부 주도 통신 표준 설정은 외국 기술에 대한 차별적 조치 · 추가적인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 필요성 제기

- USTR이 제기하는 최근 여러 이슈 중 “4대 통상현안”
 - 미국이 한국시장 개방 요구는 쌀, 농산물시장개방 등 매우 다양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른 바 “한미 4대 통상현안”으로서 크게 부각되는 사항들이 있음

<표 2-4> 한미 4대 통상현안

통상현안	미국 측 요구사항
스크린쿼터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총 상영일의 40%)에서 73일(20%) 이하로 축소(정부 7월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방침 발표 2006.1.23)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속한 시일내 수입재개(정부간 협상타결 2006.1.13)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미 연방기준 인정 및 소규모 판매자에 대해 2008년 말까지 강화된 기준 적용 유예
의약품 관련 투명성	혁신신약에 불리한 약가산정방식 개선

- 한국내에서는 한미 FTA협상 개시전 이미 4대 통상현안에 관해 한국과 미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어 협상을 반대하는 집단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어 왔음
- 이 밖에 미국이 최근 주장하는 한국의 무역투자장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정부의 국영기업: 한국가스공사(민영화 지연) 및 인천공항공단(민영화 지연), 우리금융지주화회사(정부 보유 주식 매각 지연 등)
 - 외국인투자 제한: 각종 국영기업, 통신서비스산업, 미디어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제한(현재 한국은 방송·통신·전기가스 등 기간산업에의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한국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환경 존재
 - : 국내 4대 보험사인 우체국의 금융서비스가 국내외 다른 보험·금융사들과 달리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특혜 폐지 요구, 외국계 은행지점이 대출한도를 결정할 때 본점자본금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
 - 법률시장 개방: 한국정부가 외국법률회사 개설허용조치 지연
 - 한국의 전략산업육성 정책:
 - 자동차·반도체·조선·철강 등 전통적인 수출지향형 산업과 반도체 통신 장비 등을 포함한 차세대수출지향형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정부보조금: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 등에 정부보조금 지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역할)

- 쇠고기수입: 쇠고기수입 재개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하면서도 뼈를 포함한 갈비 수입 억제에 불만
- 비관세장벽: 의약품시장의 복잡한 유통과정 및 정부결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자동차의 경우 관세인하는 물론 관련 세금단순화 및 세부담경감 요청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5~90년으로 연장 요구
- 기타: 오토바이 고속도로진입금지도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개선 요구

2) 최근 한국이 지적하는 미국의 주요무역투자장벽

- 한국정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학계 등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가장 개방된 거대 경제권이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진입장벽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하여 한국은 물론 WTO, EU 등도 미국의 여러 가지 무역투자장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음. (WTO 미국의 무역정책검토 보고서, EU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미국의 진입장벽보고서 참조)

<표 2-5> 미국의 주요 무역투자장벽

구 분	내 용
관세장벽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의류, 신발, 피혁제품, 보석류, 세라믹, 유리, 트럭, 철도차량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고관세 및 관세정점 정보기술협정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광섬유, 컴퓨터 모니터용 튜브 등 일부 품목에 관세 유지
통관장벽	일부 낙농제품, 담배 등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허가제도 과도한 인보이스 서류요건 물품수속비, 항만관리비 등 수입품에 통관이용료 부과 식료품 수출시 과도한 등록 요건 등
기술장벽/ 위생검역/ 국내규제	정부 외에 협회, 보험사 등 제3자 인증요건 국제기준과 상이, 국내에서도 주별 기준 상이 세관 샘플수거 및 검역절차에 장시간 소요 외국 신약에 대한 FDA 승인 장시간 소요
무역규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규제조치 발동 일몰재심 등으로 반덤핑조치 연장
서비스	재보험업자는 미국에 담보펀드 예치 의무 주별 전문직 자격조건이 상이하고 투명성 부족 외국건조 선박은 직간접 연안거래 제한, 정부소유나 정부지원 받는 화물은 미국적 선박에만 선적 가능
지재권	저작인격권에 제한적 인정 정부, 특허사용시 특허권자에 미통보

	세계적 추세(최초출원제도)와 달리 최초 발명자 제도 사용
정부조달	Buy American법으로 외국기업 입찰참여 직간접 제한
	안보 명목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많은 예외(외국기업 배제) 선박 제조시 국산부품 사용비율에 따른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
다자합의	보호주의적 무역보복조치
미이행	패소판정된 판결의 불충분한 이행
기타	국가안보 개념 불명확하여, 자의적 수입 제한 기능
	수출통제기술 관련 까다롭고 광범위한 법규
	경쟁력 취약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과다(농업보조금)

- 특히 1970년대 말부터 섬유, 신발, 철강 등 자국산업의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 상계관세, 특허권침해에 대한 재제를 빈번하게 이용해 왔다. 이 밖에도 통관제도, 유통규제, 기술장벽, 위생검역, 정부구매 등 국경내외에서 다양한 수입제한조치를 가동하고 있음

2. 협상진행 과정과 주요쟁점

■ 한미FTA 협상 일정



■ 협상 개시전 활동

- 2000년부터 “한미재계회의” 등 민간차원에서 한미 FTA 추진 건의
- 2004년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시작
- 2005년 3차례 사전실무회의 및 6차례 통상장관 회담 개최 (한미 FTA 출범 가능성 협의, 공감대 형성)
- 2006년 2월 3일 양국 정부 한미 FTA협상 출범 공식선언

- FTA 출범 이후 정부내 대외경제장관회의 중심으로 협상대책 및 국내보완책 논의
- 2006년 6월말 국회내 “한미 FTA 체결대책출범위원회 (국회 특위) 구성, 이후 11차례 회의 개최 및 정부 보고 청취

<표 2-6> 한·미 FTA로 인한 주요 피해분야와 정부의 보완대책

	피해예상산업	정부 대책
농업	· 농축산물 수입 1.8조~3.1조원 증가 · 농업고용 7만~14만명 감소	· 2013년까지 119조원 지원 (쌀시장 개방) · FTA이행 지원 기금 별도 마련
제조업	· 기계화학공업제품 수입 급증 · 전자·전기 등 일부품목 수입 증가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법 발동 · 사업자·직원에게 대한 사업전환 등 지원
서비스	· 스크린쿼터 축소(73일)로 영화산업 피해 우려	· 4,000억원 영화산업발전기금 마련 · 예술영화상영관 확대 등 지원

■ 본 협상 진행과정과 주요쟁점

협상 경과	주요 협상 경과	쟁점 사항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협상에서는 정부조달 분과 및 무역 관련기술장벽(TBT) 분과를 제외한 17개 분과 및 작업반이 미국 USTR과 상무부 회의실 등에서 분산 개최되었고 정부조달 분과 (5.29, 6.2) 및 TBT 분과(6.5)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 ▪ 한·미 양국은 금번 협상이 제1차 공식협상인 점을 감안, 정보 교환, 기본입장 설명 등 협정문 초안 내용에 대한 양국의 이해 제고를 위주로 협상을 진행 ▪ 아울러 대부분의 분과에서 협상이 원만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되어 당초 목표한 대로 양측 협정문 초안을 통합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기초를 마련(전체 15개 분과중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분과: 한국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 도입 주장, 미국은 TRQ 관리 상세절차 규정 제안 ▪ SPS 분과: 양측은 SPS 협의 채널 구성 문제에 이견 ▪ WTO 협정에 따른 각국의 검역기준의 인정, 통상현안 해결과 FTA 협상과의 분리, FTA 분쟁해결절차 배제 등의 원칙에 합의 ▪ 섬유 분과: 한국은 대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섬유세이프가드, 엄격한 원산지기준 주장 ▪ 무역구제: 한국은 반덤핑조치/상계관세 남용방지 위한 발동요건 강화 주장

협상 경과	주요 협상 경과	쟁점 사항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은 지난 1차 협상시 통합된 협정문을 기초로 문안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협상 초기 단계인 관계로 주요 쟁점 대부분에서는 양측의 기존입장이 견지되었음 ▪ 상품 양허안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상품/섬유/농산물의 양허안을 8월 중순경 일괄 교환기로 합의 ▪ 섬유/농산물의 경우, 양국은 양허안 기본원칙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양허안을 작성기로 함 ▪ 양국은 서비스/투자 유보안중 각국의 관심분야 목록 (request list)를 3차 협상 이전에 교환기로 함 ▪ 한국은 미국의 요구, 전략적 개방 필요성, 공공분야 훼손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차 유보안을 기초로 협상해 나갈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양국간 이견차이로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전체 2차 협상의 진행에 일부 장애 초래 ▪ 한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을 밝혔으며, 미국은 FTA 틀내에서의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중단됨 ▪ 상품 양허 관세철폐 이행기간: 즉시, 3년, 5년, 10년, 기타(undefined)* ▪ *기타(undefined)는 양허제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양허안에 대한 협상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 ▪ 한국은 미국 양허안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 미국은 상품과 섬유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협상기간중에 제시하였으나,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므로, 추가적 개선을 위해서 내주부터 4차 협상까지의 기간을 활용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분야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많은 분야에서 한·미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 ▪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유보안 내용과 상호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양측 유보안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 ▪ 미국도 우리 농업분야 양허의 개선을 요구

협상 경과	주요 협상 경과	쟁점 사항
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협상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그간 확인된 양국간 이견을 좁혀나가고,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관세양허안 타협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안점 ▪ 협상결과 상품양허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되어 소기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지난 2차 협상이후 진행해온 양국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어, 앞으로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통관절차,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등 분과에서 일정부분 성과 가시화 ▪ 또한, 농업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키로 하고,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
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 주요 관심사항(반덤핑 관련 5개 사항,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배제)을 수용하고, 금년 말 의회보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현 시점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 ▪ 이에 따라 한국은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12.6(수) 오전에 협상을 중단(미국 관심분야인 의약품, 자동차 작업반 협상을 함께 중단) ▪ 무역구제 분과, 자동차 및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가 도중에 중단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양국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상품 무역, 서비스, 지재산권 등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미국은 6억불, 한국은 3.9억불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철폐로 전환하는 성과 도출 ▪ 농산물: 축산물, 과일류 등에 대한 한국의 품목별 민감도를 전달하고 미국의 관심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메카니즘 부속서 원칙 합의,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연간 4,700만불 상당) 철폐, 저작물 병행수입 금지 철폐 등의 성과 달성

협상 경과	주요 협상 경과	쟁점 사항
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으나, 상품, 금융 등 여타 분야에서는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여 일부 진전을 이룸 ▪ 양국은 금번 협상기간중 수석대표간 연쇄회동, 수석대표와 일부 분과장이 참여하는 소규모 회동을 통해 협상의 진도를 점검하고 쟁점들에 대한 절충방향을 함께 논의 ▪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여전하여, 향후 협상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상호노력이 필요 ▪ 양국은 7차협상전에 관세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계속 보완기로 하였으며, 일부 분과는 회기간 협의를 7차 협상전에 갖는 방안을 추진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분야: 미국은 최대 관심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개선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아 양허안 전체로는 큰 진전이 없었으나, 양국이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미국은 18.9억불(457개), 한국은 14.2억불(569개)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 철폐로 전환하고, 기타(undefined) 품목의 50%를 10년철폐 대상으로 함께 개선하기로 합의 ▪ 농산물: 세부 품목별로 양국간 관심도 및 민감성 내용을 교환하여 향후 논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 섬유: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즉시철폐 및 원산지기준 완화, 섬유세이프가드 및 우회방지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 서비스/투자: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
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은 협상의 적기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 ▪ 금번 협상을 통해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과는 2-3개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실질적 협상타결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여타 쟁점들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모색하여 향후 타결기반을 마련하는 수준의 진전 달성 ▪ 그러나,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쟁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 주요 쟁점뿐 아니라 여타 분야별 쟁점들에 대해서도 협상전체 차원의 타결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양허안에서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통해 양국의 즉시철폐 비율이 품목수 기준으로 85%에 이르게 되었으나, 자동차 품목의 경우 미국이 세제문제와의 연계입장을 계속 견지하여 기타(U) 품목에 대한 협의 미진 ▪ 농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허안의 뚜렷한 접근을 이루지 못하였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의 세부 사항을 논의중이나 이견이 지속 ▪ 섬유분야에서 미국이 새로운 수정 양허안을 전달해 왔으며, 계속적인 논의 필요 ▪ 서비스.투자 협상과 관련, 양국 관심사항에 대한 중점 협의가 계속 되었으며,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견을 축소

협상 경과	주요 협상 경과	쟁점 사항
8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은 적극적으로 절충을 시도하여, 실무협상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과에서 타결 또는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하여, 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금번 협상을 통해 경쟁, 통관, 정부조달 분과는 최종 타결되었고,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분과는 1-2가지 확인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 ▪ 양국은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타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협의를 추진하고, 농업, 섬유처럼 별도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서비스, 통신 분과는 협정문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에 집중할 계획 ▪ 아울러, SPS, 의약품, 투자, 금융, 지적권, 원산지, 노동 분과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 ▪ 다만,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양국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향후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 최종타결 추진

■ 한미FTA 협상 분야

- 총 22개 Chapter로 구성
 - 상품무역 관련 6개, 서비스·투자 관련 6개, 기타 분야(경쟁, 정부조달, 지적권, 노동, 환경) 5개, 일반사항(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등) 관련 5개
 - ※ 한-칠레 FTA 21개, 한-싱가폴 FTA 22개, 한-EFTA FTA 10개 Chapter

< 협정문 목차 >

Preamble	전 문
Chapter 1	최초조항 및 정의 (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Chapter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Chapter 3	원산지 (Rules of Origin)
Chapter 4	통관절차 (Customs Procedure)
Chapter 5	무역구제 (Trade Remedies)
Chapter 6	위생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Chapter 7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Chapter 8	투자 (Investment)
Chapter 9	국경간 서비스 무역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10	일시입국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Chapter 11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Chapter 12	통신 (Telecommunications)
Chapter 13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Chapter 14	경쟁 (Competition)
Chapter 15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16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Chapter 17	노동 (Labor)
Chapter 18	환경 (Environment)
Chapter 19	투명성 (Transparency)
Chapter 20	조직규정 및 분쟁해결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Chapter 21	예외 (Exceptions)
Chapter 22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 품목별·분야별 개방 범위를 설정하는 상품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은 7월 제2차 협상부터 논의될 예정이며, 추후 부속서(Annex) 형태로 첨부됨.

■ 한·미 FTA 협상목표

○ 전반적 협상목표

- ◇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된 협상결과 도출
- ◇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 ◇ 경쟁력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 ◇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 분야별 협상목표

협상분야	분야별 협상목표
상품무역 일반	○ 내국민대우 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진 및 시장접근 기회 확보
농업	○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 - 농산물 수입관리제도(TRQ 등)의 적절한 운영 방식 규정 - 수입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원산지 / 통관	○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
무역구제	○ 거대시장인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하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 WTO SPS 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 및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SPS 문제를 협의하도록 대응 ○ 우리의 표준 및 시험검사(적합성평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양국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투자	○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 확대 ○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환경 개선 및 투자보호 강화
서비스 일반	○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를 위한 미측 자유화 조치 확대
일시입국	○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원활한 이동 보장

협상분야	분야별 협상목표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금융개방 추세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을 감안, 금융개방 기조를 유지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 등을 목표로 협상
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를 통하여 국내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 FTA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설정 및 이를 위한 협력 추진
기타 분야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 제고 등을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집행에 있어 양국간 협력 기반 마련 ○ 미국 조달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재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 ○ 우리의 노동권 보호수준 및 집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제고 및 노동분야 협력 강화 ○ 국내 환경법령 및 환경 보호수준과 조화되면서, 양국간 적절한 환경협력 사업을 마련 ○ 협정 발효 후 원활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

■ 한미FTA 협상 주요내용

상품무역 분야

- 상품(농산물 포함)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상품교역 관련, 양국간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것 외의 수출입관련 제한의 도입 또는 유지 금지
 - 부속서상의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
 -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 부속서상 양허표에 따라 관세할당제도(TRQ : Tariff Rate Quota)를 관리
 -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

- 원산지 / 통관절차
 - 상대국 상품에 FTA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을 규정
 - 역외가공 특례(한·EFTA 방식)를 규정하여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 상품의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절차적 내용을 규정
 - 원산지 자율증명제, 원산지 사전판정제, 원산지 검증제도,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방안

- 무역구제
 - 양국간 교역과정에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시 무역구제 수단으로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정
 - 미측의 반덤핑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을 다수 포함

- SPS (위생검역) / TBT (기술장벽)
 -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적용에 대하여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SPS 논의를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
 -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운영관련 상호협력 방안을 규정하고,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 촉진을 규정

서비스/투자 분야

- 투 자
 - 양국간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투자관련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
 - 단, 특정 분야에서 차별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속서상 유보목록에 기재하여 허용
 - 중대한 국제수지 위기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

한하는 긴급제한조치 발동가능한 권리 규정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일시입국

- 서비스 교역 관련 일반적인 의무사항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
- 단, 상기 의무사항에 불합치 하는 조치는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기
-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 우리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

○ 금융서비스 / 통신서비스 / 전자상거래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 (negative 방식)
-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 기존의 개방방식을 유지(positive 방식)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
- 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관련 규정상의 내용 위주로 구성
- 상대국 통신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및 이용 보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공정한 정책결정을 보장
-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

기타 분야 (경쟁, 정부조달, 지적권, 경쟁, 환경)

○ 경쟁 / 정부조달

- 무역자유화의 효과 제고를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협력을 규정
-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 상호 교환, 조달기관간 협력을 규정

○ 지식재산권

- 지재권 관련 국제규정(TRIPS 및 관련 협약)에 따른 지재권 보호원칙 확인 및 상대국 권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
- 지재권 관련 권리내용 및 보호내용의 명확화(국내 관련 법령 내용을 감안 하여 규정) 및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규정

○ 노동 / 환경

-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 규정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 및 자국 노동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
- 자국 환경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설정

일반사항 분야 (분쟁해결, 투명성, 최종조항)

- 협정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동위원회” 설치 및 협정관련 양국간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
- 협정에 관련되는 국내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 보장
- FTA 협정의 발효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내 절차 완료후 60일 이후에 발효

■ 한미FTA 진행 결과 (2007년 3월 23일 현재)

분 과	주요 타결 내용과 쟁점 사항	타결 여부
경쟁	- 동의명령제 도입 1) - 재벌에 대한 예외 없는 공정거래법 적용 - 독점기업에 적용되는 상업적 고려의무대상에서 공공요금 제외 등	완전타결
정부조달	- 미국 주정부 한국 지방정부 공기업은 제외 - 입찰최저가격 1억 원 - 학교급식 제외 - 입찰 참여시 과거 미국내 수주실적 적용 금지 - 조달 대상에 민자 시설 포함 (중소기업 보호조항 신설 등)	
기술장벽	- 기술규정과 표준 제 개정시 상대국 전문가 참여 - 통신장비에 대한 제품인증서 상호 인정 등	일부항목 확인을 전제로 한 완전 타결
환경	- 환경법 위반시 과징금 등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 - 대중참여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인 참여 허가 제도) 도입 등	
원산지/통관	- 통관 부문은 완전 타결 - 원산지 부문 미타결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한국), 한미FTA는 한미 영토 내 제품 대상(미국)	통관 및 전자상거래 완전 타결
통신서비스	- 전자상 거래 완전 타결 - 통신 지분제한 완화(미국)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장 개방(미국)	
상품무역	- 자동차 부문 미타결 : 관세 조기 철폐(한국) :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의무장착 재연기(미국) - 의약품 부문 미타결 : 신약 자료독점권, 신약 최저가 보장 요구(미국)	부분 타결
무역구제	- 무역구제 협력위 등 요구(한국) - 법률 개정 수반 조치 불가(미국)	
농업	- 쌀,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품목 개방 예외(한국) - 예외없는 개방(미국)	
섬유	- 전 품목 년 내 관세 철폐, 원사기준 예외, 관세특혜할당 요구(한국) - 한국업체 경영정보 제공 등 고강도 우회수출 방지책 요구(미국)	
금융서비스	- 우체국 보험 FTA 적용 요구(미국)	
지적재산권	- 저작권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미국) -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미국) - 실손배상주의 도입(한국) 등	
서비스	- 방송 부문 미타결 : 외국방송 더빙 허용, 방송콘텐츠 쿼터제 완화 : 케이블 TV프로그램 공급업체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위생검역	- 전문가간 기술협의 위원회 설치 원칙 합의 등 사실상 타결	
투자	- 투자자 국가 분쟁 절차 대상에서 부동산 및 조세관련 조치 제외(한국)	
노동	- 공중의견 제출제도 남용방지 방안 쟁점(한국)	
총칙	- 다른 분과와 연계 타결 방침	

1) 동의명령제도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시정 조치에 대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됨

제3절 협상의 성공 및 실패요인

1. 성공요인

- ①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공약 (political commitment)
 - 2006년 2월 협상출범선언은 이전의 수년간 조사와 토론의 결과 잠재적 어려움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공동의 정치적 약속은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겠다는 상호신뢰가 있음을 암시
- ② 강력한 경제관계 존재
 - 양국은 한미 FTA가 기존의 중요한 무역투자파트너십을 유지·강화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③ 중국의 급부상
 - 중국의 급부상은 한국과 미국에 다 같이 양면적 현상임. 즉 양국은 중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과 동시에 도전자로 인식하고 있음
 - 양국은 한미 FTA를 도전자로서의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방지책(hedge)으로 보고 있음
 - 한미 FTA는 하나의 상징적 중요성(symbolic importance)을 지니고 있어 양국은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2. 실패(방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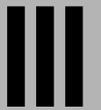
- ① 뻣뻣한 협상시한(tight deadline)
 - 미국 대통령의 무역신속추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07년 7월 1일로 규정되어 있고,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007년에 끝남
- ② 이슈의 복잡성
 - 예컨대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측은 한국측이 재벌(chaebols)의 영향력을 축소하도록 요구하고 한국정부의 규제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토록 요구함으로써 이슈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음
- ③ 일부 이슈의 정치적 민감성

- 전형적인 예로서 쌀시장 개방에 대해 한국측은 FTA에서 특별취급해 주길 강력하게 주장
 -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내국물품 인정 문제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 (미국의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
 - 한국측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규정을 협상 테이블에 놓자는 주장에 대해 미국 의회가 강력하게 반발
- ④ 미국과 한국의 경제관계의 불균형
- 미국은 한국에 비해 거대 경제권임과 동시에 무역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 협상대표들은 기본적으로 “요구자” 입장을 취하는 반면 한국협상대표들은 “방어자” 입장을 취해 왔음. 이에 따라 노무현 행정부가 대국회 딜 (deal)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⑤ 농민단체 및 노조 등 강력한 FTA 저지그룹
- 2006년 2월 한미FTA 출범 발표 이후 여러 농민단체 및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pan-national Movement Headquarters to Frustrate the South Korea-U.S FTA)등의 대규모 반대 시위 계속
 -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연합회는 한국 국민들 수천명이 지난 2006년 4월 미국 백악관에게 e-mail을 대량으로 보내 웹사이트가 마비되었다고 보도
 - 한국의 다수 정치윽져버들은 노무현정권이 보다 일찍부터 한미FTA를 출범 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지 못한 점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음
 - 다수의 한국 농민단체와 노조들은 반미의식과 무역자유화에 대한 반대의식이 강함
- ⑥ 노무현정권의 레임덕 현상 및 여당의 인기하락
-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007년으로 종료되어 이에 따라 “lame duck”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지율 역시 20%선에 머물러 있음
 - 국회 비준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미FTA협정을 얼마나 찬성할 지 의문 (다만 많은 윽져버들은 어렵게나마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음)
- ⑦ 북한과의 관계 진전 여하
-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는 한반도 정세에 크게 좌우되어 왔음

(예컨대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당시 한국과 미국간에 상당한 견해 차
이 보임)

- 최근 진행되는 6자회담(Six-Party Talks)도 한미FTA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줄 것임
 - 6자회담 성공시 FTA협상 장애물도 크게 제거되지만 실패서 반미감정이
커져 FTA저지세력이 그 만큼 커질 것임
 - 6자회담 실패 후 부시행정부가 대북 경제재제를 강화하면 한국은 미국이
자국의 평화·번영정책추진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의심이 강해지고 한미FTA도 난관에 부딪칠 것임

지역산업 파급효과



- 1 전북 산업 및 무역구조
- 2 농업 부문 영향
- 3 제조업 부문 영향
- 4 서비스업 부문 영향

제3장 지역산업 파급효과

제1절 전북 산업 및 무역구조

- 전북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2005년 말 24조 5천 720억 원으로 전국합계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북의 인구비중 3.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임

<표 3-1> 전북의 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GRDP) (십억 원)			1인당 GRDP (천원)		
	전북(a)	전국(A)	전국대비(a/A)	전북(b)	전국(B)	전국대비(b/B)
1985	3,396	87,976	3.9%	1,529	2,156	70.9%
1990	6,416	194,546	3.3%	3,135	4,538	69.1%
1995	14,112	410,131	3.4%	7,343	9,095	80.7%
2000	18,978	577,971	3.3%	9,848	12,295	80.1%
2005	24,572	815,289	3.0%	12,963	16,548	78.3%

자료: 통계청(KOSIS), 2006. 당해년도 가격기준

- 전북의 산업별 비중은 1985년 이후 농림어업부문은 27.4%에서 그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2005년 기준 농림어업 11.9%, 광공업 27.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0.6%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여전히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표 3-2>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부가가치 기준)

(단위: 십억 원,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1985	2,074 27.4%	40 0.5%	1,566 20.7%	3,887 51.4%	7,567 100.0%
1995	2,305 15.2%	71 0.5%	3,229 21.3%	9,565 63.1%	15,170 100.0%
2005	2,394 11.9%	56 0.3%	5,488 27.3%	12,189 60.6%	20,126 100.0%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에서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부가가치 기준임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 중분류 기준으로 본 전북 산업구조는 농업 및 임업이 전국대비 비중 총부가가치가 10.2%, 입지상계수가 3.3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이 여전히 전북의 특화산업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대부분 SOC관련 부문이나 공공부문 또는 소비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임
- 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등으로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제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의 발달이 부진함을 보임

<표 3-3> 전북의 주요산업 비중2)

	총부가가치 (당해년가격)			종사자수			사업체수	
	백만원	전국비중	입지상	명	전국비중	입지상	개소	전국비중
전라북도	22,451,261	3.1%		478,547	3.2%		118,809	3.7%
농림어업	2,371,256	10.2%	3.30	2,128	6.6%	2.09	182	7.9%
광업	71,934	4.5%	1.47	728	3.8%	1.19	80	4.3%
제조업	5,563,941	2.7%	0.87	82,279	2.4%	0.75	9,439	2.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425,398	2.5%	0.80	2,675	4.0%	1.28	114	7.4%
건설업	2,412,415	3.6%	1.15	24,517	3.1%	1.00	3,345	3.7%
도소매업	1,073,987	2.1%	0.69	81,728	3.3%	1.06	34,289	4.0%
숙박및음식점업	525,472	2.7%	0.88	55,490	3.3%	1.04	21,874	3.5%
운수업	741,568	2.3%	0.75	26,867	3.0%	0.97	11,801	3.5%
통신업	491,302	2.8%	0.89	5,994	4.3%	1.37	508	5.4%
금융보험업	1,429,416	2.4%	0.77	20,610	3.5%	1.10	1,392	4.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753,995	1.9%	0.61	24,186	1.6%	0.52	5,028	2.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2,193,506	4.7%	1.53	27,014	5.0%	1.59	906	7.2%
교육서비스업	1,911,939	4.6%	1.48	51,715	4.3%	1.37	5,909	4.6%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66,643	3.8%	1.24	26,871	4.1%	1.31	3,160	4.2%
기타서비스업	718,489	2.6%	0.86	45,745	3.8%	1.21	20,782	4.3%

자료: 통계청(KOSIS), 2005년 말 기준

2) 입지상은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의 구성비를 전국의 동일산업구성비와 비교하여 지역의 특정산업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수로서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함

$$LQ_{ij} = \frac{Q_{ij} / Q_j}{Q_i / Q} = \frac{j\text{지역의 } i\text{산업 구성비}}{\text{전국의 } i\text{산업 구성비}}$$

여기서, LQ가 1보다 큰 경우 j지역의 i산업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1보다 작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이고, 1인 경우는 그 지역의 해당산업이 전국수준과 동일한 특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됨

- 전북의 수출은 54억 7천 달러로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으나 전국대비 비중은 1.7% 수준으로 GRDP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볼 때 수출규모가 매우 작았으며, 수입은 25억 4천 8백 달러로서 전국대비 0.8%를 차지함
- 2006년 국내 교역은 160여 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수도권과 영남권 및 일부 충청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전북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출입 규모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표 3-4> 지역별 수출입 현황

지역명	GRDP(2005년)		수출(2006년)			수입(2006년)		
	금액 (백만원)	비중	금액 (천 달러)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천 달러)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서울	159,587,939	21.9%	24,717,564	7.6%	1	58,774,916	19.0%	15.2
부산	40,862,371	5.6%	8,090,221	2.5%	19.6	8,645,941	2.8%	16.1
대구	22,985,689	3.2%	3,545,631	1.1%	6.4	2,608,477	0.8%	18.1
인천	33,007,468	4.5%	15,941,546	4.9%	22.3	20,742,562	6.7%	26
광주	15,504,224	2.1%	9,141,999	2.8%	27.2	4,079,326	1.3%	10.9
대전	16,462,545	2.3%	2,395,862	0.7%	10.9	2,390,243	0.8%	4.3
울산	36,253,489	5.0%	54,939,555	16.9%	21.6	49,234,599	15.9%	28.1
경기	157,170,944	21.6%	63,216,600	19.4%	13.6	59,798,393	19.3%	16.2
강원	18,694,897	2.6%	1,017,289	0.3%	18.8	850,071	0.3%	17.6
충북	24,004,065	3.3%	8,053,819	2.5%	42.2	6,890,318	2.2%	25.4
충남	41,280,942	5.7%	38,961,041	12.0%	16.2	22,362,356	7.2%	25.2
전북	22,481,525	3.1%	5,470,985	1.7%	12.8	2,547,563	0.8%	3.7
전남	31,591,785	4.3%	19,045,210	5.9%	17.2	27,532,800	8.9%	20.9
경북	53,803,188	7.4%	39,517,247	12.1%	2.1	24,454,702	7.9%	7.3
경남	48,962,356	6.7%	31,338,006	9.6%	17.4	18,186,078	5.9%	13.5
제주	6,587,159	0.9%	56,766	0.0%	-10.3	244,196	0.1%	73.2
기타			15,507	0.0%	987.5	40,092	0.0%	12,773
합계	729,240,586	100.0%	325,464,848	100.0%	14.4	309,382,632	100.0%	18.4

자료: 통계청 KOSIS(2000년 기준가격),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06년 전북의 무역수지는 2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매년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미FTA 협상국인 미국과의 교역은 전북 무역규모 대비 수출 13.7%, 수입 16.1%를 차지하며 교역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3억 4천 달러 가까이 흑자를 기록함

<표 3-5> 전북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불)

연도	전체			미국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무역수지
2002	1,943,083	1,599,851	343,232	219,106 (11.3%)	219,863 (13.7%)	- 757
2003	2,866,130	2,042,837	823,293	338,596 (11.8%)	247,070 (12.1%)	91,526
2004	4,224,538	2,522,398	1,702,140	605,109 (14.3%)	364,797 (14.5%)	240,312
2005	4,850,995	2,456,326	2,394,669	626,247 (12.9%)	320,675 (13.1%)	305,572
2006	5,470,985	2,547,563	2,923,422	748,070 (13.7%)	409,372 (16.1%)	338,698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전북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최근 대중국 수출의 감소로 인하여 미국이 전북의 제 1의 수출대상국으로 진입하였으며, 4위 러시아연방과 6위 멕시코의 경우 2006년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6> 전북의 주요 수출국

(단위: 천 불, %)

순 위	국 가 명	2005년		2006년		
		금액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합계	4,850,995		5,470,985	12.8	
1	미국	626,247	12.9%	748,070	19.5	13.7%
2	중국	817,995	16.9%	696,346	-14.9	12.7%
3	일본	319,010	6.6%	341,479	7	6.2%
4	러시아 연방	103,709	2.1%	288,633	178.3	5.3%
5	콜롬비아	144,370	3.0%	215,040	49	3.9%
6	멕시코	41,408	0.9%	195,466	372.1	3.6%
7	호주	116,994	2.4%	156,645	33.9	2.9%
8	인디아(인도)	130,446	2.7%	148,315	13.7	2.7%
9	홍콩	166,711	3.4%	146,298	-12.2	2.7%
10	독일	130,374	2.7%	145,714	11.8	2.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전북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및 미국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미국

의 수입규모가 증가하여 2위인 일본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으며, 그 외 수입 국가는 독일, 대만, 브라질 등이 있음

<표 3-7> 전북의 주요 수입국

(단위: 천 불, %)

순 위	국 가 명	2005년		2006년		
		금액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합계	2,456,326		2,547,563	3.7	
1	중국	576,196	23.5%	553,302	-4	21.7%
2	일본	443,761	18.1%	415,294	-6.4	16.3%
3	미국	320,675	13.1%	409,372	27.7	16.1%
4	독일	152,120	6.2%	149,486	-1.7	5.9%
5	대만	41,184	1.7%	85,701	108.1	3.4%
6	브라질	74,503	3.0%	83,338	11.9	3.3%
7	이탈리아	36,129	1.5%	78,018	115.9	3.1%
8	사우디아라비아	75,773	3.1%	67,158	-11.4	2.6%
9	뉴질랜드	58,811	2.4%	66,745	13.5	2.6%
10	러시아 연방	40,362	1.6%	60,672	50.3	2.4%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전북의 3대 교역국가인 미국,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6년 미국은 3억 3,870만 달러의 흑자를, 중국은 1억 4,304만 달러의 흑자를, 일본은 7,382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표 3-8> 주요 국가별 전북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불)

연도	미국			중국			일본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2	219,106	219,863	- 757	315,183	348,572	-33,389	187,622	293,048	-105,426
2003	338,596	247,070	91,526	614,735	449,939	164,796	208,936	383,190	-174,254
2004	605,109	364,797	240,312	803,050	414,295	388,755	230,677	488,161	-257,484
2005	626,247	320,675	305,572	817,995	576,196	241,799	319,010	443,761	-124,751
2006	748,070	409,372	338,698	696,346	553,302	143,044	341,479	415,294	-73,81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최근 5개년 동안의 수출입현황에서 미국은 수출입규모와 무역수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은 최근 수출입규모의 축소와 함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전환되었고, 일본의 경우 수입 규모가 다소 축소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임
- 전북의 산업별 교역품목에 따른 대분류상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수출의 경우 중화학제품 위주의 공산품이 대부분(공산품 98.4%, 2006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는 1차산품이 31%, 중화학제품 중심의 공산품이 69%로 최근 1차산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표 3-9> 전북 산업별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불, %)

산업별	수출			수입			산업별 무역수지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총계	4,850,995	5,470,985	12.8	2,456,326	2,547,563	3.7	2,923,422
1차산품	97,124	85,009	-12.5	713,155	799,570	12.1	-714,561
공산품	4,753,871	5,385,976	13.3	1,743,170	1,747,994	0.3	3,637,982
경공업제품	368,737	379,404	2.9	86,817	110,466	27.2	268,938
중화학제품	4,385,134	5,006,573	14.2	1,656,353	1,637,528	-1.1	3,369,045
IT제품	192,433	214,658	11.5	141,324	152,271	7.7	62,387
기타	4,192,700	4,791,915	14.3	1,515,029	1,485,257	-2	3,306,658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전북의 수출입 품목을 10개의 품목으로 대분류 하였을 때,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와 화학공업제품으로 전체 수출액의 78.6%를 차지해 이 분야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고, 섬유류의 수출은 3억 4천 달러로서 최근 그 비중이 6.2%로 하락하여 철강금속제품의 뒤를 이어 4위를 차지함
- 한편, 주요 수입품목은 화학공업제품(29.1%), 농림수산물(28.9%) 및 기계류(13.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수입액에서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큼

<표 3-10> 전북 품목별(대분류)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불, %)

품목명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6년)
	2005년	2006년	순위	증가율	2005년	2006년	순위	증가율	
합계	4,850,995 100.0%	5,470,985 100.0%		12.8	2,456,326 100.0%	2,547,563 100.0%		3.7	2,923,422
농림수산물	78,864 1.6%	70,874 1.3%	6	-10.1	658,005 26.8%	735,813 28.9%	2	11.8	-664,939
광산물	18,283 0.4%	15,646 0.3%	9	-14.4	52,937 2.2%	52,426 2.1%	7	-1	-36,780
화학공업제품	1,148,084 23.7%	1,148,851 21.0%	2	0.1	876,039 35.7%	740,774 29.1%	1	-15.4	408,077
플라스틱고무 및가죽제품	34,046 0.7%	33,670 0.6%	8	-1.1	33,171 1.4%	38,572 1.5%	8	16.3	-4,902
섬유류	328,629 6.8%	340,221 6.2%	4	3.5	45,272 1.8%	59,187 2.3%	6	30.7	281,034
생활용품	4,490 0.1%	4,496 0.1%	10	0.1	5,947 0.2%	8,735 0.3%	9	46.9	-4,239
철강금속제품	247,100 5.1%	372,769 6.8%	3	50.9	229,377 9.3%	320,423 12.6%	4	39.7	52,346
기계류	2,688,721 55.4%	3,153,830 57.6%	1	17.3	307,693 12.5%	343,583 13.5%	3	11.7	2,810,247
전자전기제품	249,788 5.1%	284,053 5.2%	5	13.7	232,075 9.4%	239,589 9.4%	5	3.2	44,464
잡제품	52,989 1.1%	46,576 0.9%	7	-12.1	15,810 0.6%	8,461 0.3%	10	-46.5	38,11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품목명 분류는 MTI 1단위 기준으로 함

<표 3-11> 전북의 주요 수출 품목(중분류)

(단위: 천 불, %)

순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4,850,995		5,470,985		12.8
1	수송기계	2,497,085	51.5%	2,882,705	52.7%	15.4
2	석유화학제품	497,756	10.3%	511,067	9.3%	2.7
3	정밀화학제품	298,331	6.1%	285,116	5.2%	-4.4
4	제지원료및종이제품	232,084	4.8%	244,387	4.5%	5.3
5	전자부품	190,213	3.9%	225,634	4.1%	18.6
6	철강제품	143,926	3.0%	219,854	4.0%	52.8
7	섬유원료	201,177	4.1%	205,165	3.8%	2
8	비철금속제품	85,774	1.8%	148,277	2.7%	72.9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107,442	2.2%	115,330	2.1%	7.3
10	기초산업기계	58,143	1.2%	84,343	1.5%	45.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품목명 분류는 MTI 2단위 기준으로 함

<표 3-12> 전북의 주요 수입 품목(중분류)

(단위: 천 불, %)

순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합계	2,456,326		2,547,563		3.7
1	농산물	512,024	20.8%	553,359	21.7%	8.1
2	정밀화학제품	293,195	11.9%	284,977	11.2%	-2.8
3	석유화학제품	265,130	10.8%	213,512	8.4%	-19.5
4	철강제품	177,603	7.2%	204,291	8.0%	15
5	전자부품	132,811	5.4%	150,421	5.9%	13.3
6	산업기계	119,023	4.8%	141,992	5.6%	19.3
7	임산물	107,749	4.4%	127,530	5.0%	18.4
8	제지원료및종이제품	165,862	6.8%	127,086	5.0%	-23.4
9	비철금속제품	50,913	2.1%	114,835	4.5%	125.6
10	수송기계	66,838	2.7%	80,253	3.2%	20.1

주: 품목명 분류는 MPI 2단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전북의 대미 교역구조

- 한편, 한미FTA 대상국이자 전북의 제1의 수출대상국에 해당하는 미국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를 비롯하여 철강제품, 섬유원료,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제품 등 중화학제품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등의 수송기계는 전체 대미 수출액의 6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FTA협상결과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전북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의 경우 전체 품목에서 사료 등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12.8%), 기타 화학공업제품(6.2%) 등의 순으로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함
-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철금속제품이 447.7%로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음
- 한편, 주요 수입품목인 농산물은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 측면에서 두 번째로 크게(168.8%) 나타나 향후 FTA에 의한 관세 혹은 비관세 형태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하여 농산물 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분류 기준상 1만불 이상 교역규모를 보인 73개의 수출품목과 98개의 수입 품목 중 교역 상위 5대 품목의 비중은 수출이 80%인 반면 수입은 65%임

<표 3-13> 전북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중분류)

(단위: 천 불, %)

순 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합계	626,247		748,070		19.5
1	수송기계	360,757	57.6%	486,679	65.1%	34.9
2	철강제품	31,593	5.0%	49,226	6.6%	55.8
3	섬유원료	50,077	8.0%	48,502	6.5%	-3.1
4	석유화학제품	25,737	4.1%	22,548	3.0%	-12.4
5	정밀화학제품	27,515	4.4%	20,104	2.7%	-26.9
6	보석및귀금속제품	18,514	3.0%	13,504	1.8%	-27.1
7	섬유제품	10,951	1.7%	13,075	1.7%	19.4
8	제지원료및종이제품	15,534	2.5%	11,588	1.5%	-25.4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16,323	2.6%	11,333	1.5%	-30.6
10	직물	8,903	1.4%	9,776	1.3%	9.8
11	전자부품	10,150	1.6%	9,515	1.3%	-6.2
12	중전(heavy electric) 기기	4,811	0.8%	8,238	1.1%	71.2
13	섬유사	9,129	1.5%	5,813	0.8%	-36.3
14	요업제품	4,495	0.7%	5,166	0.7%	14.9
15	농산물	6,452	1.0%	5,000	0.7%	-22.5

주: 품목명 분류는 MPI 2단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3-14> 전북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중분류)

(단위: 천 불, %)

순 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합계	320,675		409,372		27.7
1	농산물	71,619	22.3%	192,533	47.0%	168.8
2	제지원료및종이제품	65,255	20.3%	52,533	12.8%	-19.5
3	기타화학공업제품	20,337	6.3%	25,490	6.2%	25.3
4	석유화학제품	47,459	14.8%	25,043	6.1%	-47.2
5	정밀화학제품	34,815	10.9%	24,635	6.0%	-29.2
6	기초산업기계	20,896	6.5%	21,899	5.3%	4.8
7	임산물	6,514	2.0%	9,465	2.3%	45.3
8	산업기계	5,375	1.7%	8,551	2.1%	59.1
9	산업용전자제품	8,945	2.8%	8,100	2.0%	-9.4
10	플라스틱제품	2,630	0.8%	6,093	1.5%	131.6
11	전자부품	5,407	1.7%	5,502	1.3%	1.8
12	비철금속제품	818	0.3%	4,477	1.1%	447.7
13	중전(heavy electric) 기기	2,077	0.6%	4,031	1.0%	94.1
14	축산물	3,132	1.0%	4,012	1.0%	28.1
15	섬유원료	6,081	1.9%	3,542	0.9%	-41.7

주: 품목명 분류는 MPI 2단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3-15> 전북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세분류)

(단위: 천 불, %)

순 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626,247		748,070		19.5
1	자동차	342,004	54.6%	455,350	60.9%	33.1
2	인조섬유	50,077	8.0%	48,502	6.5%	-3.1
3	선재봉강및철근	30,369	4.8%	46,359	6.2%	52.7
4	자동차부품	18,753	3.0%	31,329	4.2%	67.1
5	합성수지	21,784	3.5%	16,933	2.3%	-22.3
6	귀금속장식품	18,415	2.9%	13,407	1.8%	-27.2
7	의류	10,790	1.7%	12,446	1.7%	15.4
8	종이제품	15,534	2.5%	11,588	1.5%	-25.4
9	기계요소	16,243	2.6%	11,256	1.5%	-30.7
10	정밀화학원료	21,727	3.5%	11,241	1.5%	-48.3
11	반도체	9,867	1.6%	9,405	1.3%	-4.7
12	농약및의약품	5,594	0.9%	8,441	1.1%	50.9
13	건축물	7,492	1.2%	7,829	1.0%	4.5
14	기타석유화학제품	3,953	0.6%	5,615	0.8%	42.1

주: 품목명 분류는 MTI 3단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3-16> 전북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세분류)

(단위: 천 불, %)

순 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320,675		409,372		27.7
1	식물성물질	30,750	9.6%	130,905	32.0%	325.7
2	제지원료	62,449	19.5%	51,157	12.5%	-18.1
3	곡실류	1,114	0.3%	30,617	7.5%	2,648.40
4	기타농산물	38,548	12.0%	29,231	7.1%	-24.2
5	기타화학공업제품	20,337	6.3%	25,490	6.2%	25.3
6	원동기및펌프	19,633	6.1%	21,486	5.2%	9.4
7	기타석유화학제품	22,729	7.1%	16,941	4.1%	-25.5
8	정밀화학원료	15,724	4.9%	16,578	4.0%	5.4
9	목재류	6,514	2.0%	9,465	2.3%	45.3
10	합성수지	7,497	2.3%	8,098	2.0%	8
11	계측제어분석기	6,453	2.0%	7,475	1.8%	15.8
12	플라스틱 제품	2,630	0.8%	6,093	1.5%	131.6
13	농약및의약품	16,795	5.2%	6,044	1.5%	-64
14	반도체	4,494	1.4%	4,724	1.2%	5.1
15	재생섬유	6,081	1.9%	3,542	0.9%	-41.7

주: 품목명 분류는 MTI 3단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3-17> 전북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세세분류)

(단위: 천 불, %)

순 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626,247		748,070		19.5
1	승용차	329,649	52.6%	409,150	54.7%	24.1
2	폴리에스텔섬유	48,746	7.8%	46,848	6.3%	-3.9
3	봉강	30,369	4.8%	46,359	6.2%	52.7
4	기타자동차	12,355	2.0%	46,200	6.2%	273.9
5	자동차부품	18,753	3.0%	31,329	4.2%	67.1
6	합성수지	21,784	3.5%	16,933	2.3%	-22.3
7	귀금속장식품	18,415	2.9%	13,407	1.8%	-27.2
8	편직제의류	10,625	1.7%	12,167	1.6%	14.5
9	신문용지	15,522	2.5%	11,548	1.5%	-25.6
10	기타정밀화학원료	21,727	3.5%	11,241	1.5%	-48.3
11	베어링	16,238	2.6%	11,234	1.5%	-30.8
12	개별소자반도체	9,607	1.5%	9,115	1.2%	-5.1
13	의약품	5,594	0.9%	8,441	1.1%	50.9
14	순견직물	6,952	1.1%	7,422	1.0%	6.8
15	기타석유화학제품	3,953	0.6%	5,615	0.8%	42.1

주: 품목명 분류는 MPI 4단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3-18> 전북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세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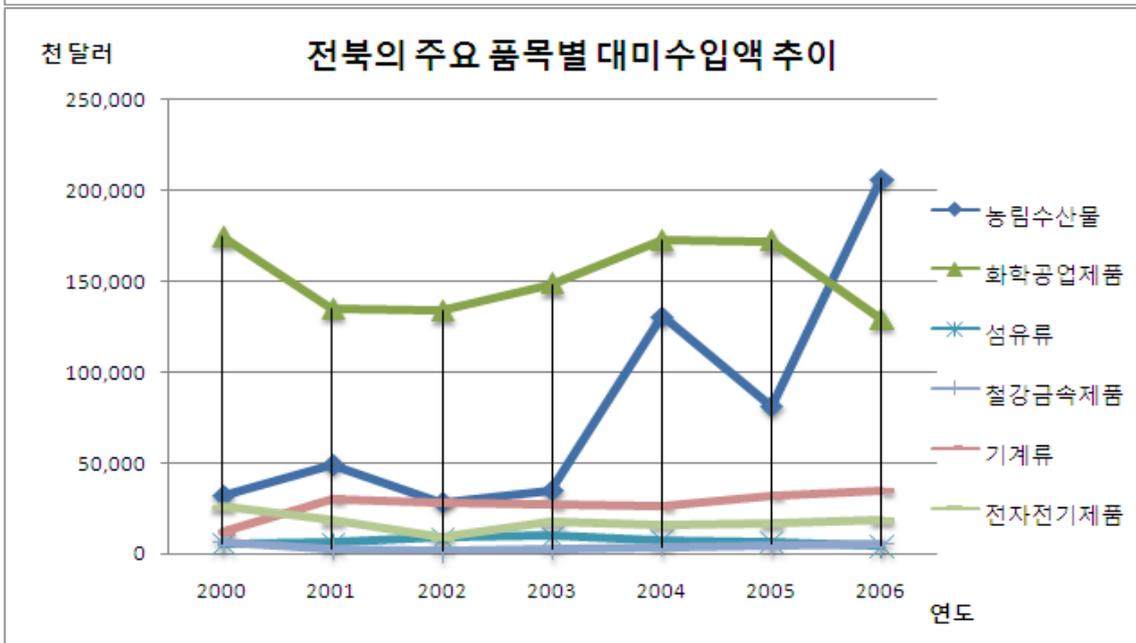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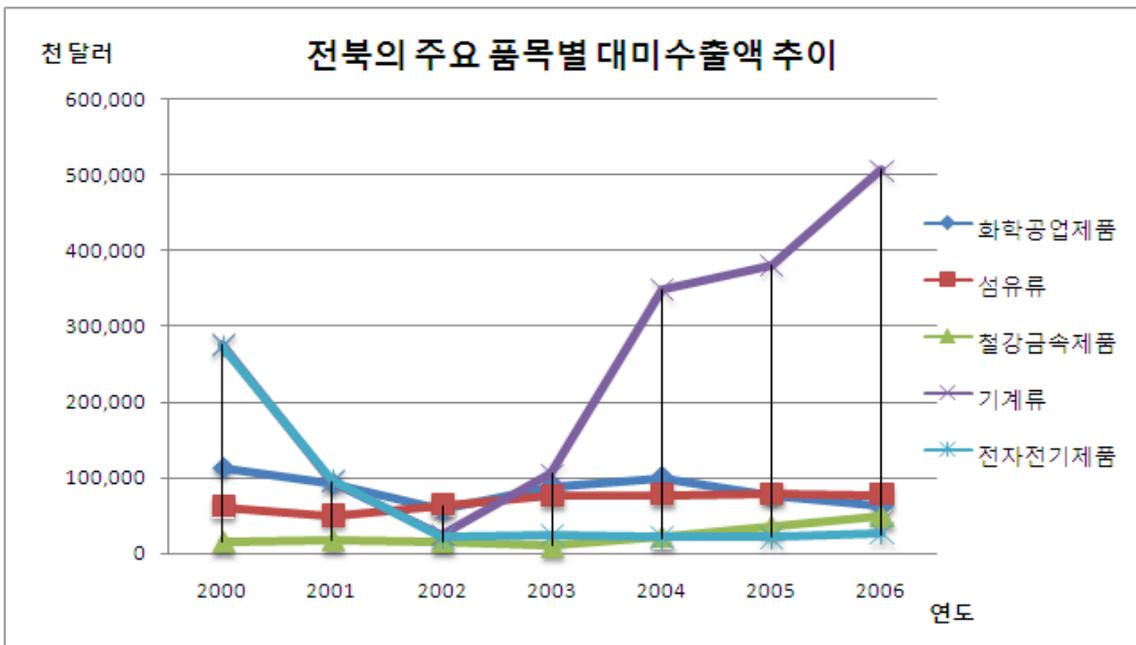
(단위: 천 불, %)

순 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320,675		409,372		27.7
1	사료	29,356	9.2%	129,544	31.6%	341.3
2	고지	55,237	17.2%	45,077	11.0%	-18.4
3	천연섬유원료	38,548	12.0%	29,231	7.1%	-24.2
4	곡류	0	0.0%	29,164	7.1%	-
5	기타화학공업제품	20,337	6.3%	25,490	6.2%	25.3
6	원동기	18,576	5.8%	21,140	5.2%	13.8
7	기타석유화학제품	22,729	7.1%	16,941	4.1%	-25.5
8	기타정밀화학원료	15,724	4.9%	16,578	4.0%	5.4
9	원목	6,189	1.9%	9,281	2.3%	50
10	합성수지	7,497	2.3%	8,098	2.0%	8
11	펄프	7,212	2.2%	6,080	1.5%	-15.7
12	기타플라스틱제품	2,273	0.7%	5,820	1.4%	156
13	분석시험기	2,744	0.9%	4,834	1.2%	76.2
14	농약	14,846	4.6%	3,804	0.9%	-74.4
15	개별소자반도체	2,813	0.9%	3,638	0.9%	29.4

주: 품목명 분류는 MPI 4단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MTI 1단위로 본 품목별 전북의 대미수출액의 추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2002년 이후 기계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2006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대미수출액을 주도하고 있음
- 한편, 수입품목의 추이에서는 농림수산물이 '04년과 '06년에 큰 폭으로 증가해 '06년 현재 그 전까지 주 수입품목이었던 화학공업제품류의 수입액을 넘어지면서 제1의 수입품목으로 대두됨



■ 시군 산업 및 교역구조

- 시군별 산업구조를 산업 대분류로 구분할 경우, 농림어업 및 광업은 익산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군산과 고창의 경우 10년 동안 동 산업에서 급격한 종사자의 감소가 이루어졌음
- 제조업 측면에서 익산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주의 경우 95년 이후 10년 동안 종사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완주는 두 배 이상 증가함

<표 3-19> 전북 시군별 산업구조(종사자수)

단위 : 명

	농림어업 및 광업		제조업		생산자 서비스		일반서비스 및 기타	
	1995년	2004년	1995년	2004년	1995년	2004년	1995년	2004년
전라북도	3,784	3,055	91,152	83,179	85,942	100,364	238,156	286,243
전주시	247	262	23,593	12,438	34,556	39,853	76,048	101,813
군산시	837	238	16,496	15,265	13,378	14,466	37,137	39,552
익산시	606	648	24,773	21,820	13,044	16,363	38,076	47,873
정읍시	195	248	6,424	5,859	5,174	4,905	17,720	18,093
남원시	177	204	3,974	3,777	3,719	5,420	14,106	16,469
김제시	127	411	4,770	6,435	3,946	4,069	11,554	12,696
완주군	109	100	4,021	10,370	1,385	3,283	7,143	9,802
진안군	123	70	682	772	1,467	1,166	4,050	3,745
무주군	53	14	390	401	1,770	1,480	4,250	5,482
장수군	44	203	609	650	899	990	3,225	3,343
임실군	185	99	1,416	1,244	1,328	1,483	4,286	4,406
순창군	61	88	1,040	1,201	1,197	1,421	4,452	4,198
고창군	867	244	1,332	1,425	2,225	2,988	7,826	9,198
부안군	153	226	1,632	1,522	1,854	2,477	8,283	9,573

주: 생산자서비스는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운수,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범위로 한정함.

자료: 전북통계연보, 각년도

- 산업별로 특화된 지역을 연결해보면, 농림업은 김제와 장수, 어업은 고창과 부안, 광업은 장수, 제조업은 완주, 전기/가스/수도는 진안과 무주 및 장수, 음식숙박업은 무주, 통신업은 순창, 부동산/임대업은 무주와 전주, 사업서비스업은 전주 등으로 나타남

<표 3-20> 시군별 산업 입지상 계수 (종사자수 기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농업/임업	0.34	0.40	0.85	1.59	0.88	3.60	0.52	2.01	0.06	6.51	2.92	2.72	2.56	2.26
어업	-	0.85	0.41	-	-	-	-	-	-	-	-	-	11.09	16.28
광업	0.06	0.88	2.03	0.63	2.21	0.32	1.08	1.64	0.96	5.12	-	-	2.77	2.61
제조업	0.46	1.25	1.43	1.14	0.83	1.55	2.50	0.76	0.31	0.71	0.98	0.99	0.58	0.63
전기/가스/수도	0.81	0.90	0.92	0.94	1.08	0.78	0.37	3.30	3.48	2.29	1.94	1.46	1.17	1.85
건설업	1.31	0.76	0.56	0.40	1.43	0.75	0.75	1.48	1.03	1.60	1.70	1.72	1.84	0.86
도소매업	1.14	0.99	0.90	1.07	1.03	0.87	0.55	0.87	0.73	0.82	0.93	0.86	1.07	1.19
숙박/음식업	1.01	1.01	0.90	0.99	1.03	0.76	0.77	0.87	2.56	0.95	0.81	0.93	1.24	1.34
운수업	1.11	1.17	1.00	1.02	0.78	1.07	0.73	0.61	0.48	0.48	0.76	0.45	0.84	0.72
통신업	0.90	0.81	0.85	0.88	1.21	1.29	1.29	1.86	1.44	1.61	1.38	2.02	1.24	1.12
금융, 보험업	1.13	0.95	0.95	1.05	1.08	0.81	0.32	1.16	0.67	1.07	0.93	1.33	0.95	1.29
부동산 및 임대업	1.43	1.05	0.99	0.73	0.60	0.41	0.46	0.15	2.87	0.14	0.10	0.17	0.34	0.50
사업서비스업	1.45	1.05	1.07	0.62	0.65	0.48	0.77	0.18	0.18	0.28	0.42	0.21	0.40	0.35
공공행정/국방 등	0.93	0.87	0.62	1.21	1.25	1.29	0.51	2.63	1.67	2.50	2.00	1.79	1.29	1.45
교육서비스업	1.13	0.88	1.00	0.95	0.93	0.88	0.98	0.96	0.75	1.05	0.99	0.92	0.95	0.88
보건, 사회복지사업	1.19	0.76	1.01	0.94	1.10	0.78	0.74	1.21	0.59	0.77	0.83	0.96	1.00	1.10
오락,문화/운동 등	1.28	0.75	0.95	0.99	1.32	0.75	0.51	0.45	1.34	0.51	0.45	0.54	0.91	0.87
기타공공 수리 등	1.02	1.04	0.98	1.03	1.02	0.99	0.61	0.98	0.92	1.16	1.10	1.19	1.10	0.98

자료: 2005전북통계연보, 2004년 말 기준

- 전북 시군별 수출입 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 수출규모로는 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순으로 4개 시군의 수출실적이 전북 전체 수출의 95.1%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군산시의 경우 27억2,849만달러의 수출로 전체 56.2%를 차지함
- 2005년중 가장 큰 수출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무주군으로 전년 대비 2464% 증가하였고 장수군은 48.6%로 뒤를 이었고, 무주군의 김치 수출재개와 장수군의 장갑(45.7%) 수출 호조로 높은 증가율 시현의 주요 원인이었음
- 반면, 가장 낮은 수출증가를 보인 지역은 29.0% 감소한 고창군이며 남원시 (Δ 14.3%)와 함께 유일한 감소세를 보임
 - 고창군의 최대 수출품목이던 뱀장어('04년 475만달러)가 2005년 어획량 감소 및 수출단가 문제로 수출이 전무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04년 도내 14개 지자체중 9위를 차지하던 고창군이 '05년엔 13위로 하락

- 남원시는 수출상위 품목(종이제품, 의류, 귀금속 등) 대부분이 감소함에 따름
- 한편 가장 큰 수입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진안군으로 2004년 대비 46.1% 증가함

<표 3-21> 시·군별 수출액 및 주요품목

(단위 : 천달러, %)

순위	시군별	수출금액			수출상위 품목(비중)			최대 수출국
		금액	증감	비중	1위	2위	3위	
1	군산시	2,728,494	17.4	56.2	자동차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중국
2	전주시	830,153	17.5	17.1	합성수지	인조섬유	제지	중국
3	완주군	546,982	23.7	11.3	자동차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알제리
4	익산시	507,934	2.1	10.5	반도체	동제품	귀금속	중국
5	정읍시	102,123	24.1	2.1	공기조절기	제지	고정식축전기	중국
6	김제시	53,795	20.4	1.1	자동차부품	파프리카	발전기부품	일본
7	장수군	28,387	48.6	0.6	의류	화학공업제품	인조섬유	프랑스
8	남원시	19,685	△14.3	0.4	제지	의류	건전지	일본
9	진안군	7,606	3.7	0.2	전자응용기기	인삼류	장류	중국
10	부안군	7,310	21.4	0.2	해조류	사료	한약재	일본
11	임실군	6,942	31.6	0.1	산식물	플라스틱제품	섬유제품	일본
12	순창군	5,345	18.1	0.1	장류	음료	생활용품	미국
13	고창군	5,253	△29.0	0.1	복합비료	해조류	배	말레이시아
14	무주군	256	2,464	0.0	김치	주방용품	장류	영국

주: 품목분류는 MTI 3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이해를 위해 대표상품 기재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2005년 전북지역 시군별 수출입 실태조사

제2절 농업 부문 영향

■ 미국의 농업³⁾

- 1억 7,55만ha의 세계 제1의 경지면적의 규모를 가진 미국은 농가인구가 자국내 인구의 2%인 590만 명에 불과하여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이 한국의 60배가 넓은 약 30ha로서 세계의 농업 강국임
- 미국은 넓은 경지면적을 활용한 곡물(62.5%)과 사료작물(35.5%)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채소와 과일의 재배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2%에 불과
- 세계 생산에서 미국이 1위인 품목은 옥수수, 대두, 쇠고기, 닭고기 등의 15개 품목이고, 사과, 당근, 돼지고기, 오렌지 등 세계 2위 품목은 20개 달함
- 2002년 미국의 곡물자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기장(202%), 쌀(185%), 밀(146%), 옥수수(115%) 등은 수출 여력이 크다고 보이며, 기타 작물로는 대두(147%), 그레이프푸르츠(250%) 등이 있음
- 전체적인 자급률이 107%에 달하는 축산물은 2004년 쇠고기 26억 달러, 돼지고기 12억 달러, 닭고기 15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보여 곡물(223억 달러)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품목군에 해당함

<표 3-22> 미국이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순위와 주요 품목(2004)

순위(품목수)	주요 품목
1위 (15개)	옥수수, 수수, 대두, 쇠고기, 닭고기, 아몬드, 블루베리, 우유, 크렌베리, 그레이프푸르트, 딸기, 칠면조고기, 견과류 등
2위 (20개)	사과, 당근, 돼지고기, 상치, 오렌지, 버섯, 배, 토마토, 버찌, 면섬유, 면실, 계란, 꿀, 흡혈매, 자두, 시금치, 사탕무, 호두 등
3위 (12개)	복숭아, 밀,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우, 헤이즐넛, 아마인, 귀리, 건조양파 등
4위 (9개)	오이, 마늘, 포도, 땅콩, 감자, 호박, 잎담배, 수박 등
5위 (4개)	양배추, 메밀 등

- 2003년 기준 미국 수출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은 대두, 옥수수, 소맥, 목화, 조제식품, 쇠고기 등임

3) 권오복(2006), '한미FTA의 농업부문 파급 영향' 세미나 자료집에서 발췌하여 요약하였음

<표 3-23> 미국의 10대 수출·입 농산물(2003)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억 달러)	품목	금액(억 달러)
1	대두	79.3	알콜증류음료	38.0
2	옥수수	49.7	포도주	34.0
3	밀	39.5	맥주	28.8
4	목화	33.8	쇠고기	23.4
5	쇠고기	25.9	커피콩	17.1
6	닭고기	15.1	파스타	13.3
7	염장육류	14.7	바나나	13.3
8	담배	14.2	설탕과자	11.5
9	돼지고기	12.4	토마토	11.1
10	대두박	11.8	초콜릿제품	11.0

■ 한미 농산물 교역 현황

-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농산물시장은 일본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으로 1995년 9천 500만 달러에서 2004년 2억 8,51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
- 대미 수출농산물 대부분은 가공식품으로 순수농산물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

<표 3-24> 한국의 대미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5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농산물	81	94	124	148	185	192	222
	축산물	4	6	10	13	18	22	53
	임산물	10	8	12	13	12	10	10
	총계	95	108	146	173	214	224	285
수입	농산물	2,522	2,157	1,430	1,527	1,314	1,392	2,197
	축산물	566	530	809	660	978	1,165	338
	임산물	418	372	198	186	182	184	211
	총계	3,506	3,059	2,437	2,373	2,473	2,740	2,745
무역수지	농산물	-2,441	-2,062	-1,306	-1,379	-1,129	-1,200	-1,975
	축산물	-562	-525	-799	-648	-960	-1,143	-285
	임산물	-408	-364	-186	-173	-170	-174	-201
	총계	-3,411	-2,951	-2,290	-2,200	-2,260	-2,516	-2,460

주)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곡물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축산물, 두류, 과일 순으로 나타나며, 2004년 미국으로부터 11억달러가 수입된 곡물 중에는 옥수수(7억 8,200만달러)와 밀(2억 7,400만 달러)이 주종을 이룸

<표 3-25>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5		2000		2003		2004	
곡류	곡류합계	1,551,435	44.3%	481,163	19.7%	312,660	11.4%	1,091,293	39.8%
	쌀	-		225	0.0%	7,883	0.3%	32,768	1.2%
	밀	307,870	8.8%	213,477	8.8%	260,469	9.5%	274,353	10.0%
	옥수수	1,238,981	35.3%	265,608	10.9%	41,782	1.5%	782,110	28.5%
서류	서류합계	24,143	0.7%	36,216	1.5%	28,844	1.1%	30,574	1.1%
	감 자	24,143	0.7%	36,212	1.5%	28,843	1.1%	30,572	1.1%
두류	두류합계	390,134	11.1%	294,599	12.1%	325,205	11.9%	376,925	13.7%
	대두	387,303	11.0%	292,055	12.0%	322,942	11.8%	374,317	13.6%
채유종실		8,046	0.2%	3,424	0.1%	13,723	0.5%	14,909	0.5%
과실류	과실류합계	89,799	2.6%	116,393	4.8%	189,337	6.9%	207,182	7.5%
	오렌지	33,937	1.0%	72,938	3.0%	124,942	4.6%	142,855	5.2%
	포도	11,309	0.3%	11,869	0.5%	17,988	0.7%	17,997	0.7%
채소류	채소류합계	41,447	1.2%	49,138	2.0%	60,491	2.2%	59,106	2.2%
	토마토	5,807	0.2%	9,570	0.4%	13,035	0.5%	12,915	0.5%
	단옥수수	15,126	0.4%	24,993	1.0%	26,674	1.0%	26,572	1.0%
기 타	식물성유지	48,281	1.4%	46,386	1.9%	35,469	1.3%	19,734	0.7%
	사료	32,520	0.9%	89,074	3.7%	131,740	4.8%	128,680	4.7%
	기 타	262,921	7.5%	228,795	9.4%	172,959	6.3%	166,772	6.1%
농산물 합계		2,521,880	71.9%	1,429,659	58.7%	1,391,501	50.8%	2,196,506	80.0%
축산물류	쇠고기	324,772	9.3%	533,501	21.9%	886,778	32.4%	103,233	3.8%
	돼지고기	38,488	1.1%	16,518	0.7%	17,644	0.6%	43,527	1.6%
	치이즈	11,336	0.3%	11,793	0.5%	17,083	0.6%	20,610	0.8%
	축산부산물	43,089	1.2%	87,121	3.6%	88,745	3.2%	93,494	3.4%
	기 타	148,395	4.2%	159,965	6.6%	154,613	5.6%	76,742	2.8%
축산물 합계		566,080	16.1%	808,898	33.2%	1,164,863	42.5%	337,606	12.3%
임산물류	원목	179,399	5.1%	77,208	3.2%	94,499	3.4%	109,619	4.0%
	견과류	20,272	0.6%	18,462	0.8%	32,099	1.2%	41,462	1.5%
	기 타	108,620	3.1%	45,602	1.9%	18,949	0.7%	31,479	1.1%
임산물 합계		417,586	11.9%	198,051	8.1%	183,718	6.7%	210,934	7.7%
총계		3,505,546	100.0%	2,436,608	100.0%	2,740,082	100.0%	2,745,046	100.0%

자료: 권오섭(2006)에서 수정 및 재인용

■ 국내 및 전북의 농업 지표

- 농업비중이 전통적으로 높은 전북은 국토면적에 비해 경지면적이 넓고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비중도 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나 수입총액 대비 농산물 비중도 전국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

<표 3-26> 전북의 농업 지표 추이

			1995		2000		2005	
			값	전국 비중	값	전국 비중	값	전국 비중
전라북도	면적 (km ²)	국토면적(a)	8,058.03	8.1%	8,050.07	8.1%	8,054.62	8.1%
		경지면적(b)	2337.45	11.5%	2185.57	11.5%	2132.7	11.6%
		(b)/(a)	29.0%		27.1%		26.5%	
	인구 (명)	총인구(a)	2,009,651	4.4%	2,006,500	4.2%	1,895,500	3.8%
		농가인구(b)	485,276	10.0%	388,907	9.6%	318,998	9.3%
		(b)/(a)	24.1%		19.4%		16.8%	
	부가가치 (백만원)	총부가가치(a)	12,805,109	3.5%	17,160,347	3.3%	22,451,261	3.1%
		농림어업 분야(b)	2,131,218	9.4%	2,324,351	9.8%	2,371,256	10.2%
		(b)/(a)	16.6%		13.5%		10.6%	
	수출액 (천달러)	전품목 수출총액(a)			2,881,057	1.7%	4,850,995	1.7%
		농림수산물 수출액(b)			57,682	1.9%	78,864	2.3%
		(b)/(a)			2.0%		1.6%	
수입액 (천달러)	전품목 수입총액(a)			1,501,319	0.9%	2,456,326	0.9%	
	농림수산물 수입액(b)			368,452	3.4%	658,005	4.3%	
	(b)/(a)			24.5%		26.8%		
전국	면적 (km ²)	국토면적(km ²)(a)	99,268.38		99,460.74		99,646.16	
		경지면적(km ²)(b)	20,327		18,989		18,356	
		(b)/(a)	20.5%		19.1%		18.4%	
	인구 (명)	총인구(명)(a)	45,981,910		47,976,730		49,267,751	
		농가인구(명)(b)	4,851,080		4,031,065		3,433,573	
		(b)/(a)	10.5%		8.4%		7.0%	
	부가가치 (백만원)	총부가가치(백만원)(a)	371,095,187		514,658,056		726,193,274	
		농림어업 부가가치(b)	22,613,288		23,750,741		23,253,979	
		(b)/(a)	6.1%		4.6%		3.2%	
	수출액 (천달러)	수출총액(a)			172,267,510		284,418,743	
		농림수산물(b)			3,066,366		3,423,710	
		(b)/(a)			1.8%		1.2%	
수입액 (천달러)	수입총액(a)			160,481,018		261,238,264		
	농림수산물(b)			10,783,202		15,337,988		
	(b)/(a)			6.7%		5.9%		

자료: 통계청, 전북통계연보, 한국무역협회

■ 전북 농업에 미치는 영향

- 한미FTA의 농업부문 과급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양허조건 및 연구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농업생산 감소액의 편차가 크게 존재함

<표 3-27> 한미FTA의 시나리오별 농업생산 피해규모

시나리오	시장개방 내용	국내 농업생산액 감소액(억원)
KIEP	쌀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 80% 감축	9,000
USITC	전 품목 관세철폐	88,000
KREI	쌀 제외한 곡물과 유지작물은 관세 50% 감축, 나머지 관세철폐	22,830
최세균(2006)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철폐, 부분균형모형 사용	12,000-20,00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80% 감축할 경우 농업부분 피해액은 9,000억 원으로 전망. KIEP는 모형을 운용할 때 모든 품목의 관세를 현행수준에서 80% 감축하는 가정에다 한미FTA가 체결 될 경우 서비스 등 기타 산업의 생산성이 1% 증가한다는 가정을 설정함
- 2001년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쌀을 관세 즉시철폐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한국 농업 생산 이 모두 8조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1995년 데이터를 기준 으로 하여 최근 10년간의 농업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피해액 8조 8,000억 원 중 가공식품의 피해는 8조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한 반면, 쌀, 육류, 과일 등 신선농산물의 피해는 약 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 정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 임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현 재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과 유지류의 관세를 50% 감축할 경우 우리 농업생 산액이 최저 1조 1,552억 원에서 2조 2,830억 원까지의 감소할 것으로 예측

4) 정재현, '한미FTA 농업분야 무엇이 쟁점인가'

<표 3-28> 분석 시나리오(KREI)

구 분	내 용
시나리오 1	·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밀 제외)과 유지작물은 50% 감축
시나리오 2	· 쌀 제외,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밀 제외)과 유지작물 관세는 30% 감축, 주요 민감품목(과일·채소, 축산물, 낙농제품) 관세 80% 감축, 나머지 품목 관세 철폐
시나리오 3	· 쌀 제외,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밀 제외)과 유지작물은 10% 감축, 주요 민감품목(과일·채소, 축산물, 낙농제품) 관세 50% 감축, 나머지 품목 관세 철폐

<표 3-29> 한·미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미국	-2,114	-1.5	-1,793	-1.3	-1,070	-0.8
곡물(밀제외)	-465	-18.6	-244	-9.8	-82	-3.3
채소·과일	-2,554	-2.9	-2,011	-2.3	-1,200	-1.4
유지작물	-882	-49.6	-498	-28.0	-144	-8.1
기타작물	-1,792	-8.4	-1,874	-8.8	-1,963	-9.2
축산물	-9,031	-14.5	-6,533	-10.5	-3,380	-5.4
낙농제품	-1,110	-3.6	-624	-2.0	-142	-0.5
가공식품	-3,837	-2.0	-3,582	-1.9	-2,883	-1.5
음료 및 담배	-1,045	-1.3	-844	-1.0	-687	-0.8
계	-22,830	-3.7	-18,003	-3.2	-11,552	-1.9

자료: 권오복(200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CGE모형의 추정 결과를 인용하여 전북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추계한다면, 시나리오1의 경우 국내의 농업생산감소액이 총 2조 2,830억 원으로 전국대비 전북의 농업부가가치 비중을 고려한다면 전북의 농업 생산감소액은 약 2,329억 원으로 추산 가능함
- 한편,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품목별 생산감소액을 추정한 최세균(2006)의 연구에 따르면 쇠고기를 비롯한 대두, 돼지고기, 사과, 닭고기, 포도 등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피해액 상위 20개 품목의 전체 피해액은 쌀을 제외하더라도 1조2천 억~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음

- 최세균(2006)은 쇠고기의 경우 관세철폐를 가정했을 때 3,600억 원의 생산자 잉여의 감소가 예상되고, 가정을 완화하여 관세 5년후 철폐는 평균, 2,400억 원, 10년철폐, 2,200억 원, 관세 50% 감축은 1,840억 원 등으로 추정하였음
- 대두의 경우 가공용 수입 대두는 5%이하의 저율관세를 적용받지만, 용도를 제한받지 않는 수입 대두는 487%의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감소율이 84.8%로 가장 피해폭이 크게 예측되었고, 닭고기의 경우 미국산 수입닭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68%로 매우 높아 1,2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됨

<표 3-30>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액 감소 순위(국내)

순위	품목	'01 ~'03 평균농업생산액 (억원)	감소비율(%)	생산감소액 (억원)
1	미곡	97,047	-	-
2	쇠고기	20,998	12.5	3,600
3	대두	2,749	84.8	2,713
4	돼지고기	27,639	6.8	2,300
5	사과	4,970	24.9	1,264
6	닭고기	7,446	12.8	1,200
7	포도	4,797	17.3	1,135
8	감귤	3,972	19.0	793
9	낙농품	5,228	5.0	602
10	고추	15,001	5.4	516
11	배	3,544	12.6	434
12	인삼	5,023	5.6	309
13	감자	5,550	4.5	250
14	마늘	1,832	4.0	225
15	복숭아	1,721	12.0	221
16	양파	2,748	7.1	184
17	토마토	2,671	3.0	172
18	딸기	6,189	2.5	160
19	천연꿀	1,333	-	-
20	연초	2,946	-	-

자료: 최세균(2006)

- 한편, 전북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리의 경우 전국대비 비중이 34.8%로 가장 높으며, 생강(28.3%), 인삼류(20.5%), 밀(18.5%) 등의 품목이 높은 비중을 점유함

<표 3-31> 전북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품 목	현행 관세		재배면적(ha/두수)			생산량(톤)		
	TRQ	초과분(기본)	전국(E)	전북(F)	비율(F/E)	전국(G)	전북(H)	비율(H/G)
쌀	5.0		955,229	142,466	14.9	4,679,991	741,910	15.9
보리	30.0	513.0	33,024	10,767	32.6	128,390	44,655	34.8
밀	1.8		2,395	308	12.9	7,678	1,417	18.5
옥수수	1.8	328.0	15,176	556	3.7	73,470	1,735	2.4
감자	30.0	304.0	32,728	3,174	9.7	894,215	81,379	9.1
고구마	45.0		17,178	2,597	15.1	282,526	40,539	14.3
콩(두류)	27.0		117,552	8,095	6.9	198,757	13,736	6.9
고추	50.0	270.0	61,299	7,389	12.1	161,380	19,477	12.1
마늘	50.0	360.0	31,766	685	2.2	374,980	6,743	1.8
양파	50.0	135.0	16,737	736	4.4	1,023,331	37,742	3.7
생강	20.0	377.3	2,264	636	28.1	28,797	8,147	28.3
인삼류	20.0	222.8	14,153	2,768	19.6	14,561	2,984	20.5
사과	45.0	45.0	26,907	933	3.5	367,517	11,391	3.1
배	45.0	45.0	21,807	1,031	4.7	443,265	27,657	6.2
포도	45.0	45.0	22,057	1,235	5.6	381,436	21,069	5.5
복숭아	50.0	50.0	15,014	814	5.4	223,701	13,211	5.9
감	67.5	67.5	26,831	1,113	4.1	363,822	13,316	3.7
딸기	45.0	45.0	6,969	557	8.0	201,995	15,668	7.8
장미	8.0	27.0	751	53	7.1	678	43	6.3
카네이션	8.0	18.0	116	5	4.3	123	4	3.3
국화	8.0	18.0	797	44	5.5	560	26	4.6
밤	50.0	219.4		2,676		76,447	2,616	3.4
호도	45.0	45.0				868	111	12.8
대추	50.0	611.5				8,216	144	1.8
쇠고기	40.0	40.0	2,019,516	203,417	10.1	141,641	14,164	10.0
돼지고기	25.0	25.0	9,382,039	1,092,349	11.6	701,526	81,377	11.6
닭고기	20.0	20.0	119,164,091	16,367,828	13.7	300,718	41,198	13.7
유제품	40.0	176.0	464,056	35,634	7.5	48,171	3,472	7.2
치즈	36.0	36.0				59,763	3,647	6.1
꿀	20.0	243.0	2,098,762	247,338	11.8	23,820	2,787	11.7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상기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상위 20대 피해 품목과 생산감소액을 추산해 본 결과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만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북의

농축산물 상위 15개 품목의 생산감소액은 1,336억 원으로 예상됨

- 쇠고기의 경우 전북 농축산물 중 생산감소액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행 40%의 관세율이 철폐된다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 가격의 하락과 함께 호주나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입 대체로 인한 결과임
- 또한 쇠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의 증가는 국내산 돼지고기와 대체재 관계를 더 이룰 것으로 보여 돼지고기의 생산 감소액도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남
- 쌀의 경우 15.9%로 전국에서 적지 않은 생산비중을 보이고 있는 전북의 입장에서 쌀이 포함된 협상문이 작성되어질 경우 지금까지 시나리오 결과보다 수 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됨

<표 3-32> 전북의 주요 농산물 생산 감소액

품 목	현행 관세		생산량(톤)			생산감소액 (억 원)
	TRQ	초과분 (기본)	전국(G)	전북(H)	비율 (H/G)	
쇠고기	40.0	40	141,641	14,164	10.0	360.0
돼지고기	25.0	25	701,526	81,377	11.6	266.8
콩(두류)	27.0		198,757	13,736	6.9	187.5
닭고기	20.0	20	300,718	41,198	13.7	164.4
인삼류	20.0	223	14,561	2,984	20.5	63.3
포도	45.0	45	381,436	21,069	5.5	62.7
고추	50.0	270	161,380	19,477	12.1	62.3
유제품	40.0	176	48,171	3,472	7.2	43.4
사과	45.0	45	367,517	11,391	3.1	39.2
배	45.0	45	443,265	27,657	6.2	27.1
감자	30.0	304	894,215	81,379	9.1	22.8
복숭아	50.0	50	223,701	13,211	5.9	13.1
딸기	45.0	45	201,995	15,668	7.8	12.4
양파	50.0	135	1,023,331	37,742	3.7	6.8
마늘	50.0	360	374,980	6,743	1.8	4.0
합 계						1,335.8

제3절 제조업 부문 영향

1. 전북 제조업 산업구조

■ 전북 제조업 현황 및 특화 업종

- 전북의 제조업 현황은 2005년 말 사업체 수가 2,434개로 전국대비 2.1%를, 부가가치는 7조 7,956억 원으로 전국대비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종사자 및 출하액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를 보임

<표 3-33> 전북 제조업의 부문별 현황

부 문	1999년	2002년	2005년
사업체수(개)	2,123 (2.3%)	2,358 (2.1%)	2,434 (2.1%)
월평균 종사자수(명)	71,910 (2.8%)	70,509 (2.6%)	72,218 (2.5%)
출하액(백만원)	14,703,616 (3.1%)	16,513,621 (2.6%)	22,248,579 (2.6%)
부가가치(백만원)	6,222,601 (3.1%)	6,418,912 (2.6%)	7,795,779 (2.5%)

주: 5인 이상 제조업체 대상, 백분율은 전국 총계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제조업 분야를 업종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사업체수, 종사자수, 그리고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전국 수준과 비교한 결과, 음식료품,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 등, 화합물/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과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업종에서 우위를 보임
- 담배제조업, 봉제의복/모피제품과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은 사업체수는 많으나 종사자수나 부가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여 해당 업종의 대부분 사업체에서 규모의 영세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표 3-34> 전북 제조업종별 현황(2005년)

전 북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부가가치		
	(개)	전국비중	(명)	전국비중	입지상	(백만원)	전국비중	입지상
제조업 전체	2,385	2.0%	71,543	2.5%		7,719,742	2.5%	
음·식료품 제조업	505	6.0%	13,276	7.1%	2.86	1,402,596	7.4%	2.98
담배 제조업	1	8.3%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15	1.3%	3,678	2.4%	0.96	237,123	2.8%	1.1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3	2.2%	3,558	3.1%	1.24	88,182	1.4%	0.5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	0.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27	6.1%	1,531	5.8%	2.31	125,943	8.3%	3.3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2	2.7%	3,009	4.9%	1.96	465,442	8.8%	3.5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8	1.1%	1,162	1.2%	0.47	38,508	0.5%	0.2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	1.7%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7	3.1%	5,505	4.2%	1.68	1,277,945	4.7%	1.9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4	1.5%	3,115	1.5%	0.61	276,879	1.9%	0.7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98	7.2%	5,493	6.3%	2.53	544,613	5.1%	2.07
제 1차 금속산업	37	1.3%	2,613	2.2%	0.90	300,826	1.2%	0.4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57	1.0%	2,266	0.9%	0.36	139,502	0.9%	0.3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0	0.9%	4,231	1.3%	0.52	369,668	1.4%	0.5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6	0.7%	95	0.3%	0.14	3,885	0.1%	0.0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61	1.0%	1,401	1.0%	0.39	143,015	1.4%	0.56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7	0.5%	3,678	1.0%	0.38	152,981	0.2%	0.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8	0.6%	280	0.5%	0.19	11,231	0.3%	0.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2	4.0%	14,534	5.7%	2.30	1,901,389	5.9%	2.4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	0.6%	69	0.1%	0.03	9,495	0.1%	0.03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10	1.8%	1,552	1.9%	0.76	91,039	2.1%	0.84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5	3.2%	163	2.3%	0.93	9,850	1.8%	0.72

주: 5인 이상 제조업체 대상
 자료: 통계청(KOSIS), 2007

- 1999년 이후 입지상계수의 변화를 보면, 계수가 2.0 이상으로 지역내 특화도가 높은 산업은 전통적인 음·식료품과 펄프·종이 산업과 더불어 목재·나무, 자동차, 비금속광물제품 등 5개 산업으로 나타남. 또한 화학제품, 섬유제품도 비교적 높은 특화도를 보임
- 그러나 이들 전북에 특화된 산업들은 자동차, 화학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산업에 해당하여 전북의 제조업 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함을 보여줌

<표 3-35> 전북 제조업종별 입지상(특화계수) 변화 추이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부가가치 기준	매우 높음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음·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비금속 광물제품
	비교적 높음	화합물 및 화학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가구 기타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낮음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종사자수 기준	매우 높음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음·식료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비교적 높음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합물 및 화학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합물 및 화학제품 가구 및 기타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재생용가공원료 생산업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낮음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나머지 제조업 전부

주 : 매우 높음은 특화계수가 2.0 이상을, 비교적 높음은 1.0 이상 2.0 미만을, 낮음은 1.0 미만을 가리킴.

■ 시군별 제조업 현황

- 시군별 제조업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 입지상 계수를 보면, 몇몇 제조업종별로 시군마다 뚜렷하게 특화된 산업구조를 보임
- 업종별로 특화된 지역을 연결해보면, 섬유제품 및 봉제의복은 전주, 목재나 무제품은 남원을 비롯하여 군산과 장수, 펄프 및 출판 등은 전주, 고무/플라스틱은 정읍, 비금속광물은 무주, 1차금속산업은 군산, 기타 기계장비는 정읍, 기타 전기기계는 익산, 전자부품 등은 익산과 정읍, 의료/정밀기기는 김제와 전주, 자동차/트레일러는 완주와 군산, 기타 운송장비는 군산, 재생용 가공원료는 김제 등으로 특징지어짐

<표 3-36> 전북 시군별 제조업 입지상 계수(종사자수 기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음·식료품	0.38	0.71	1.06	1.25	1.39	1.61	0.30	3.11	1.21	1.81	3.62	4.25	2.64	3.30
담배	-	-	-	-	-	-	-	-	-	-	-	-	-	-
섬유제품	1.82	0.15	1.62	0.35	-	0.29	0.92	-	-	-	-	-	-	-
봉제의복/모피제품	4.54	0.20	1.03	-	-	-	-	-	-	-	-	-	-	-
가죽가방/신발	-	-	-	-	-	-	-	-	-	-	-	-	-	-
목재/나무제품	0.16	2.46	0.35	0.23	5.83	-	0.39	-	-	2.38	-	-	-	-
펄프/종이/종이제품	3.64	0.75	0.17	1.79	0.88	1.30	0.17	-	-	-	1.12	-	-	-
출판/인쇄 등	5.56	0.37	0.38	0.85	-	-	-	-	-	-	-	-	-	-
코코스/석유정제품 등	-	-	-	-	-	-	-	-	-	-	-	-	-	-
화합물/화학제품	1.35	0.83	1.19	0.61	0.17	0.24	1.79	-	-	-	0.30	-	0.91	-
고무/플라스틱제품	0.53	0.78	0.76	2.55	-	1.69	1.60	-	-	-	-	-	-	0.51
비금속광물제품	0.24	1.18	1.17	0.27	1.64	1.57	0.41	2.00	9.24	1.95	1.57	1.50	2.12	2.24
제 1차 금속산업	0.21	2.85	0.75	0.75	-	0.66	-	-	-	-	-	-	-	-
조립금속제품	1.23	0.65	1.15	0.71	0.95	1.71	1.05	-	-	-	-	-	-	0.77
기타 기계/장비	1.03	0.28	0.51	5.00	0.51	1.83	0.92	-	-	0.28	-	-	-	-
컴퓨터/사무용 기기	-	-	-	-	-	-	-	-	-	-	-	-	-	-
기타 전기기계 등	1.62	0.33	2.30	0.72	-	0.66	-	-	-	-	-	-	-	-
전자부품,영상 등	0.31	0.13	2.17	2.30	-	-	1.14	-	-	-	-	-	-	-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2.91	-	-	-	-	7.63	-	-	-	-	-	-	-	-
자동차/트레일러	0.04	1.95	0.62	0.22	0.30	0.94	2.28	-	-	-	-	-	-	-
기타 운송장비	-	4.51	-	-	-	-	-	-	-	-	-	-	-	-
가구 및 기타 제품	0.61	0.43	1.79	0.98	2.62	0.87	0.15	-	-	-	1.89	-	-	-
재생용 가공원료	-	-	-	-	-	6.24	-	-	-	-	-	-	-	-

자료: 2005전북통계연보, 2004년 말 기준

- 전북의 제조업종별 특화분야를 각 지표별로 살펴보면, 전북의 특화산업이 약간의 차이를 보임. 입지상의 경우 비교우위 업종은 목재·나무제품, 자동차, 펄프·종이,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봉제의복·모피제품,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등으로 나타나며, 상대적노동생산성지수와 상대적단위노동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종은 목재·나무제품, 자동차, 펄프·종이, 섬유제품, 화학제품 등으로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3가지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화합물 화학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제조업 등 5개 업종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구성비가 높은 특화산업으로 분류되며, 이들 산업 가운데 특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은 현 추세로 보아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표 3-37> 전북의 제조업 특화 업종

	입지상(LQ)		상대적 노동생산성지수 (CLP) ⁵⁾	상대적 단위노동비용지수 (CULC) ⁶⁾
	부가가치기준	종사자수기준		
1	목재 및 나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목재 및 나무제품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제외)
4	음·식료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섬유제품(봉제의복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합물 및 화학제품	기타 운송장비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가죽, 가방 및 신발	화합물 및 화학제품
7	섬유제품(봉제의복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가구 및 기타 제품	가구 및 기타 제품
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9		섬유제품(봉제의복제외)		조립금속제품
10				가죽, 가방 및 신발

5) 상대적 노동생산성지수(comparative labor productivity: CLP)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해 투입된 노동의 상대적인 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됨

$$CLP_{ij} = \frac{Q_{ij} / Q_i}{L_{ij} / L_i} = \frac{j\text{지역 } i\text{산업의 산출량 비중}}{j\text{지역 } i\text{산업의 노동투입량 비중}} = \frac{Q_{ij} / L_{ij}}{Q_i / L_i} = \frac{j\text{지역 } i\text{산업의 노동생산성}}{\text{전국의 } i\text{산업 노동생산성}}$$

6) 상대적 노동생산성지수와 비슷하게 생산측면이 아닌 비용측면을 고려한 상대적 단위노동비용지수(comparative unit labor cost: CULC)는 다음과 같으며, 지수가 낮을수록 우위에 있음

$$CULC_{ij} = \frac{W_{ij} / W_i}{VA_{ij} / VAL_i} = \frac{j\text{지역 } i\text{산업의 임금 비중}}{j\text{지역 } i\text{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 \frac{W_{ij} / VA_{ij}}{W_i / VA_i} = \frac{j\text{지역 } i\text{산업의 평균비용}}{\text{전국의 } i\text{산업 평균비용}}$$

2. 전북 제조업 교역구조

■ 미국과 교역 현황

- 품목별 교역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로 자동차는 2005년 기준 총 수출액의 21.1%, 무선통신기기가 14.1%, 반도체가 8.7%의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석유제품이 5.2%, 자동차부품이 5.0%, 컴퓨터가 3.3%의 비중을 차지함
- 한편 우리의 대미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 반도체제조용장비, 항공기부품 등이며 반도체가 전체의 18.6%, 반도체제조용장비가 7.4%의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계측제어분석기가 3.8%, 컴퓨터가 2.5%, 정밀화학원료가 2.4%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8> 한미 품목별 교역 구조

(단위: 백만달러, %)

수출품목('05년)	금 액	비 중	수입품목('05년)	금 액	비 중
자동차	8,736	21.1	반도체	5,692	18.6
무선통신기기	5,838	14.1	반도체제조용장비	2,274	7.4
반도체	3,630	8.7	항공기및부품	1,646	5.3
석유제품	2,172	5.2	계측제어분석기	1,170	3.8
자동차부품	2,101	5.0	컴퓨터	781	2.5
컴퓨터	1,369	3.3	정밀화학원료	749	2.4
의류	1,046	2.5	곡실류	726	2.3
철강관	815	1.9	원동기및펌프	659	2.1
고무제품	799	1.6	기초유분	600	1.9
총계	41,343	100.0	총계	30,58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양국 제조업의 단순평균 관세율(실행관세율)은 평균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3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주요 대미 수출 업종인 자동차 산업 및 섬유업의 관세율은 양국 모두에서 8% 혹은 이들 업종 중 일부 품목의 관세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들 업종의 관세철폐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우 승용차의 관세율은 2.5%로 낮은 편이지만, 트럭의 경우 25%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관세철폐로 인한 완주 현대 상용차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화학, 일반기계, 정밀기기, 금속제품 등 주요 부품·소재 분야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은 5-8%의 수준인데 반해, 미국의 관세율은 0-5%의 수준을 보여 이들 업종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표 3-39> 양국의 주요 제조업별 관세율 수준

업종	한국	미국
	평균관세율	평균관세율
음식료	27.2(12.3)	8.8(4.1)
목재 가구	(3.1)	(4.2)
제지 인쇄	0	0
섬유	10.7(9.3)	10.9(13.1)
화학	5.98(5.27)	3.41(2.79)
철강	0.61	0.18
금속제품	8.0(6.8)	2.9(2.7)
일반기계	6.3	1.7(1.4)
전기기계	6.7(6.3)	3.0(2.6)
가전	7.31	2.23
통신기기	1.1(0.4)	1.2(0.2)
전자부품	0	0
자동차(승용)	8	2.5
승합차	10	2
트럭(덤프제외)	10	25
특장차	8	0
부품	8	1.5
항공기	0	0
조선	0(상선)-8(요트, 기자재)	0(상선, 해양구조물)-2.4(요트, 엔진)
정밀기기	5.5(4.2)	1.2(1.1)

주: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안은 기준평균 관세율

자료: 산업연구원(2006)

<표 3-40> 관세율 수준별 제조업의 분포

관세수준	한국	미국
8% 이상	음식료, 섬유, 자동차, 요트, 조선기자재	음식료, 섬유, 상용차
5~8%	화학,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가전, 정밀기기	
2.5~5%	목재가구	목재가구, 화학, 금속제품, 전기기계
0~2.5%	통신기기	일반기계, 가전, 통신기기, 승용차 및 부품, 요트, 선박용 엔진, 정밀기기
0%	제지인쇄, 철강, 전자부품, 항공기, 상선	제지인쇄, 철강, 전자부품, 항공기, 상선

자료: 산업연구원(2006)

■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⁷⁾

- 시장접근 확대에 의한 무역창출 효과의 확대
 - 한·미 FTA의 일차적 기대효과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상호 시장접근의 확대에 의한 무역창출 효과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무역창출효과는 다시 기존 주력제품의 비협상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강화에 따른 교역확대와 시장접근 확대에 의해 그동안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제품(least-traded goods)의 교역확대 효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다만, 미국의 관세율 수준이 낮아 가격경쟁력 차이와 그로 인한 무역창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
 - 양국의 관세수준을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양국 모두 음식료와 섬유의 수입 관세가 높은 편이나, 제지인쇄, 철강, 전자부품, 항공기, 상선 등 대미 교역에서 무관세인 업종의 한·미 FTA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관세 수준이 높으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업종에서의 경우 한·미 FTA의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기대
 - 목재가구, 정밀화학, 금속제품, 전기기계업종은 미국의 관세가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 미국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대미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예상

- 무역전환 효과
 - 그동안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핵심 부품과 소재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일종의 무역전환효과를 통해 부품·소재부문의 대일 수입의존 및 무역적자 개선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러한 무역전환 효과는 FTA체결국 보다는 FTA 체결이후 역외국과의 차별적 관세적용에 따른 교역관계 변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후생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로 간주되기도 함
 -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설사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품목이 있

7) 장석인, '한미FTA와 제조업 관련 주요 이슈' 세미나 자료집 재인용

는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성이 일본보다 크게 낮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역전환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한미 기술협력의 확대

- 한·미 FTA를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혜택 중 시장접근 확대와 관련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대효과의 하나는, 한미 양국의 확대된 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 양국기업의 상호간의 외국인투자와 기술협력의 확대임

○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 등 동태적 효율성 제고효과

- 생산과 무역의 특화(specialization)를 통해 FTA 체결국의 생산자들이 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생산에서 얻는 경제성은 장기적으로 효율증대 효과로 나타남
- 이런 의미에서 FTA가 역외국과의 무역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FTA로 인한 시장접근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와 외부경제 효과로 인한 효율성 제고 효과로 인해 추진되기도 함
- 실제 미국입장에서 한미 FTA의 타당성과 파급영향을 분석한 IIE의 보고서(2001)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말로 미국과 특히 한국이 FTA를 추진해야 할 주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

○ 장기적 관점의 산업구조 구조고도화 효과

- 한·미 FTA와 같은 능동적인 개방전략의 채택을 통해 해외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혁신자원을 흡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혁의 추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이시욱, 2006)
- 또한 한·미 FTA는 미국의 선진 경영기법의 이전 및 경쟁 촉진을 통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한미 FTA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예상 우려 사항

- 구조조정 가속화 : 미국의 FTA 체결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고용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실업 증가

- 유망산업의 발전 저해 : 한미 FTA는 최근 독자적 기술개발에 기초하여 미래 성장 유망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의지를 저해하여 우리 경제를 저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락시킬 위험 존재
- 미국경제 종속 : 미국의 자본유입 및 경기의 동조화 등 경제 전반의 미국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급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양극화 심화(이해영, 2006)

<표 3-41> 한미 FTA 체결시 제조업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 확대로 인한 무역창출 효과 확대 - 무역전환효과 - 외국인직접투자 및 한미 기술협력 확대 - 규모의 경제, 외부 경제 등 동태적 효율성 제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 가속화 - 유망산업의 발전 저해 - 미국경제의 종속

■ 제조업 분야의 거시경제적 효과

- 한·미 FTA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발표된 제조업 분야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42> 한미FTA 제조업의 경제적 효과

구 분	CGE 정태모형(산업자원부)	CGE 자본축적모형: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산업자원부)	CGE 자본축적모형:생산성 증대효과 고려(KIEP)
생 산	0.79%(3.3조원)	4.53%(18.7조원)	5.4%(22.9조원)
고 용	1.27%(40천명)	6.52%(208천명)	4.3%(127천명)

- 주 1) 산업자원부 자료는 대외경제위원회 공동연구결과로서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가 추정.
 2) 산업자원부 자본축적모형에는 생산성 증대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음.
 3) 생산성증대 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쌀을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결과임.

- 산자부 자료와 KIEP 자료 모두 CGE 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나, 모형의 설정 및 시장개방 시나리오는 서로 다름
- 산자부 자료에서는 제조업만의 시장개방(100% 개방)을 가정하고 파급영향을 분석한 반면, KIEP 자료에서는 농업(80% 개방)과 제조업(100% 개방)뿐만 아

나라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교역장벽 20% 인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생산성 증대 효과를 반영

-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할 경우, 한·미 FTA 체결로 제조업부문의 생산은 5.4%(22.9조원), 고용은 4.3%(127천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산자부 자료는 서비스부문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시장개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 의한 혜택이 서비스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제조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반면 생산성 증대 효과를 반영한 자본축적모형은 전 산업부문의 시장개방을 가정하는 동시에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했기 때문에, 산자부 자료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서비스 교역장벽의 계량화 및 생산성 증대 효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음
-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기초로 전라북도 제조업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측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측면에서 종사자 비중을 고려하여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43> 전북 제조업의 경제적 효과

구 분	CGE 정태모형 (산업자원부)	CGE 자본축적모형: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산업자원부)	CGE 자본축적모형:생산성 증대효과 고려(KIEP)
생 산	0.79%(825억 원)	4.53%(4,675억 원)	5.4%(5,725억 원)
고 용	1.27%(1,000명)	6.52%(5,200명)	4.3%(3,175명)

- 모형에 따르면, 전북 제조업의 생산 측면에서 증가액은 825억 원~5,725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고용 측면에서 증가 인원규모는 1,000명~5,2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제조업종별 영향

- 한·미 FTA의 영향을 주로 한·미간 해당 업종의 분업구조와 수출입 특화, 비교우위,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연구원(2006)분석에 따르면, 수출이 수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은 섬유, 자동차,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으로 이들 업종은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의 특징과 함께 특정품목의 대미수출에 있어 비교우위 품목이라는 점임
-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음식료, 정밀화학, 일반기계 등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음식료와 같이 경쟁적 분업구조에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 비교열위인 업종의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생산위축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 한·미 FTA의 영향이 미미하거나 교역관계에서의 영향이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목재가구, 제지인쇄, 석유화학, 철강, 가전, 전자부품, 항공기, 조선, 정밀기기 등으로 철강, 전자부품의 경우처럼 무관세업종이거나 교역규모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임

<표 3-44> 한미FTA의 제조업 주요 업종별 영향

업종	분업구조	수출특화 분야	수입특화 분야	전체 경쟁력	FTA의 영향	비고
음식료	경쟁적	-	-	비교열위	①부정적	- 전체적으로 경쟁력 열위 - 미국은 저렴한 자국산 원료(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가격 및 품질우위
목재 가구	보완적	중저가 가구 (비교우위)	목재 원자재 (비교열위)	비교열위	③중립적	- 한국의 대미 수출품인 가구의 미국 관세율은 0% - 한국의 대미 수입품인 목재 원자재의 한국 관세율은 2%
섬유	보완적	중저가 범용품 (비교우위)	산업용 섬유, 섬유소재, 고가 의류 (비교열위)	비교열위	⑤긍정적	- 대미 수입품은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가제품 - 산업전반의 경쟁력수준은 비교열위지만, 한국의 주력수출품인 범용품의 높은 경쟁력으로 인해 대미수출에 긍정적
석유화학	보완적	합성수지 등 범용유도품 (비교우위)	고부가가치제품, 중간원료 (비교열위)	비교열위	③중립적	- 범용품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역적자 - 무역은 수급갭(범용품), 기술력(고부가가치제품)에 의해 결정
정밀화학	보완적	범용품 (비교우위)	중간체, 원재 등 핵심원료 (비교열위)	비교열위	②다소 부정적	- 전 부문에서 수입특화도 높아

업종	분업구조	수출특화 분야	수입특화 분야	전체 경쟁력	FTA의 영향	비고
금속제품	보완적	저부가가치 · 저급품 (비교우위)	고부가가치· 고급품 (비교열위)	비교 열위	③중립적	- 무역규모 미미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금속제품의 비중은 0.5-0.8%)
일반기계	보완적	범용기계 장비 (비교우위)	반도체장비, 가공공작기계 (비교열위)	비교 열위	②다소 부정적	- 수출창출 가능분야: 가공공작기계, 볼 베어링 등 미국의 관세율(8%) 이 높은 중소기업형 분야 - 수입확대 분야: 반도체장비중 8%의 관세율 적용 분야,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터빈, 압축기 등
전기기계	보완적	범용전동기, 차단기, 변압기 등 (비교우위)	대용량 발전기, 초정밀배전제어 장치, 원자로 등 고기술 분야 (비교열위)	비교 열위	④다소 긍정적	- 수출증대효과가 수입증대 효과보다 클 것으로 예상
가전	보완적	영상기기 (비교우위)	음향·생활가전 (비교우위)	비교 우위	③중립적	- 현지 생산으로 수출은 미미한 증가 - 피해 예상품목도 미미한 수준
통신기기	보완적	휴대폰 (비교우위)	통신장비 및 핵심부품 (비교열위)	비교 우위	④다소 긍정적	- 관세효과만 고려시 중립적 -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통신 기술 및 표준협상시 긍정적 효과 기대
자동차	보완적	중소형자동 차, 부품 (비교우위)	대형 고급차 (비교열위)	비교 우위	④다소 긍정적	- 한국의 높은 수출특화도(0.907)
조선	보완적	상선 (비교우위)	레저용 보트 (비교열위)	비교 우위	③중립적	- 상선은 무관세 - Inflatable은 수출증가 가능 - 레저용 보트는 한국 개발 초기단계
정밀기기	보완적	로우엔드형 제품/미들엔 드형 제품 (비교우위)	하이엔드형 제품 (비교열위)	비교 열위	③중립적	- 통신용 계측기 등 일부 경쟁 품목에서는 FTA로 인한 경쟁과 협력의 가능성이 공존

자료: 산업연구원(2006)

- 제조업종별 파급효과에 관한 정량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어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손익계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다만, 일반론적 관점에서 전라북도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생산액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을 검토하면 음식료 및 화학제품은 부정적인 영향을, 자동차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지연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섬유봉제의류 부문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3-45> 전북 제조업종별 현황(전북대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개	전북대비	명	전북대비	백만원	전북대비
제조업(15~37)	2,385	100.0%	71,543	100.0%	7,719,742	100.0%
음·식료품 제조업	505	21.2%	13,276	18.6%	1,402,596	18.2%
담배 제조업	1	0.0%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15	4.8%	3,678	5.1%	237,123	3.1%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3	7.7%	3,558	5.0%	88,182	1.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	0.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27	5.3%	1,531	2.1%	125,943	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2	3.4%	3,009	4.2%	465,442	6.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8	2.9%	1,162	1.6%	38,508	0.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	0.1%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7	5.3%	5,505	7.7%	1,277,945	16.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4	5.6%	3,115	4.4%	276,879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98	12.5%	5,493	7.7%	544,613	7.1%
제 1차 금속산업	37	1.6%	2,613	3.7%	300,826	3.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57	6.6%	2,266	3.2%	139,502	1.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0	6.3%	4,231	5.9%	369,668	4.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6	0.3%	95	0.1%	3,885	0.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61	2.6%	1,401	2.0%	143,015	1.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	1.1%	3,678	5.1%	152,981	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8	0.8%	280	0.4%	11,231	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2	6.4%	14,534	20.3%	1,901,389	24.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	0.3%	69	0.1%	9,495	0.1%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10	4.6%	1,552	2.2%	91,039	1.2%
재생용 가공원료 산업업	15	0.6%	163	0.2%	9,850	0.1%

주: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자료: 통계청(KOSIS), 2005년 말 기준

■ 주요 업종별 파급효과⁸⁾

(1) 자동차 산업

○ 대미 수출증가 효과

- 한미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산 승용차는 추가적인 2.4%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수익성 개선 및 판매증대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음
- 트럭의 경우에도 미국이 25%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업체들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향후 동 관세가 철폐된다면 한국업체는 320만 대 규모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임
-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 진출한 한국의 완성차 업체와 미국 자동차업체의 Global Sourcing이 증가하는 가운데 FTA가 체결되면 국산부품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되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임

○ 대미 수입증가 효과

- FTA 체결로 국내수입관세 8% 철폐시 미국 Big3(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는 국내에서 7.4% 가격경쟁력 향상 예상
- FTA가 체결되면 우선 관세 8%가 감면 되는 데다 취득단계에서 특소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이 동반인하 되어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7.4%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미국차의 국내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Big3 외에 도요타, 혼다, 닛산 등 미국내 일본업체 생산 차량도 상당량 수입될 것으로 예상
- 운임 및 보험료를 감안하더라도 미국현지생산 일본차('05년 약 330만 대)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우회수입 예상

○ 통상관계 개선

- 미국 Big3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우리 업계는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수출증대 보다는 현지생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GM(12개)·Ford(14개) 공장폐쇄 및 인원 각 3만 명 감원계획

8)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요약 정리하였음
 업종별 참여연구기관은 기계산업진흥회, 석유화학공업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신발산업협회, 자동차공업협회, 전기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철강협회 등임

- 한국자동차 미국시장 판매확대에 대한 미국의회 및 업계 경계 강화
- 한미FTA가 체결되어 양국간 통상환경 개선으로 통상마찰 및 통상 코스트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미국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섬유산업

○ 관세 철폐효과

- 미국의 섬유류 평균관세율은 8.9%이나 15% 이상의 고관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전체 섬유류의 13%를 차지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유지됨
- 이러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고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對미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2005년 섬유쿼터제도 폐지로 인한 우리의 對미 수출 감소 영향을 한미FTA 체결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3-46> 미국의 초고관세(20%초과) 적용품목 현황

(단위 : 개, %)

HS	주요 품목	개수	관세율
51	양모, 섬수모 및 그 직물	12	25
54	인조장 섬유	4	25
55	인조단 섬유	5	25
58	특수직물, 자수포	2	20.2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30	21.6~28.2
62	의류 및 부속품	28	20.9~28.6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2	20.9

자료 : 미국 2005년 관세율

○ Yarn Forward 완화시 효과

- 미국의 대표적인 섬유분야 비관세 장벽의 하나는 Yarn Forward로 정의되는 엄격한 의류원산지 규정임
- 한국의 높은 對미 의류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경우 향후 FTA 협상시 섬유분야의 가장 핵심 쟁점이슈는 섬유류 원산지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 '05년말 기준 對미 섬유제품(의류포함) 수출은 12억 6,000만 달러로 전체 對미 섬유류 수출액 대비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Yarn Forward 완화시 완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고관세 철폐효과와 함께 원부자재 소싱의 폭이 넓어져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므로 중고가 의류를 중심으로 對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미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 미국의 섬유류에 대한 관세율은 완제품에 가까울수록 고관세를 유지하는 경사관세 구조이며 섬유직물 평균관세율은 11.0%, 의류제품 평균관세율은 15.1%로 추정됨(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8.9%이나 15~32%의 관세정점을 이루는 품목도 전체의 13%를 차지
- 2005년 對미 섬유류 수출액인 23억 2,700만 달러를 기준으로 단순 관세 철폐시 수출증대효과는 약 2억 달러(무역연구소), Yarn Forward 완화시 對미 섬유수출 비중이 높아져 약 4억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됨
- 2005년 우리나라 총 섬유수출에서 對미 수출비중은 17%이나 한미FTA 체결시 동 비중이 약 20%까지 상향될 것으로 추정

○ 대미 수입에 대한 영향

-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관세율도 의류 등 완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경사관세 구조이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對미 수입은 섬유사와 직물 등 섬유소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對미 관세 철폐로 인한 미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對미 섬유류 수입에 있어서 섬유사와 화섬원료, 직물 등 섬유소재의 비중이 63.2%나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율이 높은 의류의 對미 수입비중은 20.3%에 불과
- 이는 한국의 對미 수입액이 2005년 기준 2.4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임

○ 국내 섬유업계에 미치는 영향

- 1990년대 이후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의 해외투

- 자가 활성화되었으나 한미FTA 체결로 무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한미FTA의 협상 결과로 원산지 기준의 결정방향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오더 집중현상을 이웃한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국내 생산 및 수출업체와 미국 바이어들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Strategic Partnership)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고용감소 현상이 한미FTA를 계기로 섬유생산 및 수출확대와 함께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마지막으로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미국내 산업용 섬유생산 기술의 이전으로 국내 섬유업체가 지향하고 있는 섬유산업 고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

(3) 석유화학산업

○ 관세인하 효과

△ 수출측면

- 석유화학제품은 생산기술이 범용화되어 제품의 품질이 비슷하고, 수급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국제상품으로 가격이 국제경쟁력의 관건이기 때문에 FTA로 관세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큰 폭의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석유화학은 산업특성상 국내 전방산업의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내수지향적 성격이 강하며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
- 또한 미국과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기 FTA를 체결한 인접 경쟁국 등과 비교시 운송기간 및 운송비 등에서 20~30%의 추가 부담이 발생, 수출 경쟁에서 불리
- 특히 미국의 인접국인 캐나다의 경우 우수한 투자여건으로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이 현지에 생산공장을 가동중이며, 생산의 절반을 수출하는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출국

△ 수입 측면

- 수입은 우리나라 관세 폐지로 인한 수입제품의 경쟁력 증가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입이 증가, 무역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①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관세(합성수지 기준 6.5%) 폐지에 따른 가격인하 영향이 높은 해상운임료를 보전키 어려움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움
- 다만 특화 그레이트 제품(2,000달러/톤 이상), 특화 제품 등 해상운임료를 보전할 수 있는 제품은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② 석유화학 Specialty 제품, 다운스트림 정밀화학제품, 기초화학소재제품의 입지축소

- 고부가가치제품(Specialty), 정밀화학제품 및 기초화학소재 제품 중 다수의 분야에서 아직 한국제품은 기초 및 생산기술, 규모 측면에서 미국제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열위에 있음
- 특별한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Specialty 제품이 미국기업에 개방될 경우,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 위축과 개발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

③ 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제품의 내수기반 약화

- 고급 플라스틱 가공품, 고급기능성 섬유, 플라스틱 첨가제,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수요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축소되어 해당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석유화학제품의 내수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
-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충분한 기술개발 등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가격경쟁이 치열한 범용제품분야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향후 가격경쟁력 면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동 및 동남아 제품과의 경쟁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도 초래될 우려

(4) 기계산업

-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은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2005년 기준 18.4%(41억 달러), 수입비중이 20.6%(44억 달러)이며, 일반기계산업의 구매특성상 양국의 관세가 철폐 되더라도 교역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일반기계산업의 구매는 가격보다는 기술·품질, 납기 및 A/S가 중요
- 수출증가 효과는 미국의 관세율이 무관세 또는 1~2% 수준(평균관세율 : 1.7%)이므로 관세 철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관세 인하효과는 크지 않지만, FTA 체결에 따른 미국 시장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입증가 효과는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77% 이상이 8~13%(평균관세율 : 6.4%)이지만, 범용제품은 이미 가격·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 관세 인하 효과가 적지만, 첨단기계류 및 부품은 관세 인하효과로 증가 예상
 - 첨단기계류 및 부품(전자부품장착기, 수직형머시닝센터, 액체펌프, 베어링, 밸브 등)은 기술·품질 면에서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 제품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출부문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미국이 이미 관세가 낮아 관세 철폐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부문은 범용제품은 이미 가격·품질경쟁력을 확보되어 관세 인하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제조용기계, 공작기계, 밸브 등의 첨단제품은 관세 철폐 효과로 증가 예상
 - 건설광산기계는 실행관세율이 이미 무관세인 관계로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임
 - 공작기계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3%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은 범용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품질경쟁력이 확보되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머시닝센터, NC기어절삭기 등 첨단제품이 증가할 전망
 - 농업용기계는 우리나라의 주력기종인 소형트랙터가 양국이 이미 무관세이지만, FTA가 체결되면 미국 시장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은 국내수요기종과 미국의 생산제품이 달라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금형은 국내기업은 범용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對미 수입품의 대부분인 정밀·특수 금형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관세의 철폐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임
- 베어링은 FTA 체결로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산 베어링이 가격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게 되어 국내 베어링 산업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對미 수출확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반도체제조장비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 수출 증가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전자부품장착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 예상

(5) 정밀화학산업⁹⁾

○ 수출 영향

- 미국의 정밀화학제품 관세율은 우리나라(평균 6.87%) 관세율 보다 낮은 평균 2.64% 수준으로 일부 정밀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자국 생산이 가능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6.5%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철폐할 경우 우리 제품의 수출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의약, 화장품·향료, 접착제 등의 경우 관세가 없거나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농약은 수출 규모가 미미하여 관세가 폐지되더라도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정밀화학분야에서는 염·안료, 도료·잉크, 계면활성제, 기타 화학제품 등에서 소폭의 수출 신장 기대
- 다만, 국내 성장 잠재력이 크고 미국 내수시장 규모도 막대한 의약, 화장품·향료, 염·안료, 도료·잉크 등의 경우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신장 예상
- 그러나, 정밀화학제품의 경우 관세장벽보다는 환경규제 및 원산지규정 증명 등에서 애로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국내 화학제품 수출을 위한 안정성 평가 상호 인정, 등록정보 보호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주력할 필요

9) 정밀화학산업은 전자·정보, 기계, 자동차, 섬유, 의약, 환경·에너지 등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제품을 공급하는 중간소재형 산업으로 소량다품종이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다용도 특수기능을 갖는 기술집약적 산업

- 기능성 화학소재 : 전자·정보용 소재, 염·안료, 도료·잉크, 촉매, 접착제, 첨가제, 사진용 화합물 등
- 생리활성 제품 : 의약, 농약, 화장품·향료 등

○ 수입 영향

- 정밀화학제품은 가격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최종 완제품이 아닌 연관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제품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및 관련제품의 고급화 등에 영향이 커, 수입이 증가 예상
- 현재 미국 수입비중이 높은 염료, 안료 및 사진용 화합물 등은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보다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수입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규모가 큰 의약 및 화장품 분야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6) 중전기기산업

○ 관세인하 효과 : 수출입 영향

- 긍정적인 측면 :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진출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현재 우리나라 중전기기의 對미 수출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멕시코가 28.3%로 1위, 중국이 19.6%로 2위, 일본이 10.4%로 3위, 한국은 1.9%로 8위로 나타남
- 對미 품목별 수출비중은 전동기 26.2%, 변압기 15.2%, 변환 및 안정기 10.8%, 발전기 10.4%, 배전기 10.4%, 전선 9.5% 순으로 나타남
- 對미 품목별 수입비중은 발전기 3.7%, 전동기 3.7%, 변압기 3.4%, 차단기 2.1% 순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미국의 수입시장 현황과 우리나라의 관세 및 對미 수출입구조 등을 고려할 때, FTA 체결시 범용 전동기, 차단기, 변압기 등의 경우 수출 증가 예상
- 부정적인 측면 :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6.7% 이상이며,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3%이므로 가격경쟁력이 우위였던 품목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취약한 대용량 발전기, 초정밀 배정제어장치, 원자로 등의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발전설비의 핵심기자재인 터빈발전기의 설계기술은 GE(미국),

Westing-house(미국), Alstom(프랑스), Siemens(독일) 등 소수업체만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통상관계 호전 등
 -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의 전통적인 중전기기보다는 정보화된 전력기기 또는 디지털 전기기계 등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이들 분야의 기술협력 가능성
 - 우리나라 대용량 발전기, 조정밀 배전 및 제어장치 및 원자로의 경우 기술협력 또는 판매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판단됨

(7) 전자산업

- 디지털TV 등 국내 생산제품의 수출확대 효과 기대
 - 국내 생산하는 디지털TV 및 기타 프리미엄급 생활가전의 경우 관세 철폐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주요 기업들은 현재 멕시코 현지공장체제 구축 등 해외생산 비중을 높여가고 있으므로 FTA 체결로 인한 수출 확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 삼성전자 멕시코법인(SAMEX)의 경우, '05년 D-TV(360만 대), LCD모니터(170만 대) 생산(설립 '96년)
-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수출주력 제품은 무관세로 효과 미미
 -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등은 첨단산업 교역 자유화를 위한 ITA(정보기술협정)를 체결하여 이미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음
 -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다소 높아 FTA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관세인하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을 전망
 - 현재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품질 및 디자인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여 국내시장 경쟁력 확보
 - 다만,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소규모 수요 증가는 예상되나 최근 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효과는 적을 것으로 전망
- 전자의료기기 및 계측기 등 기술력이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은 일부 피해 예상

제4절 서비스업 부문 영향

■ 국내 서비스 산업

-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 서비스에서부터 지식기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음. 전통적인 서비스수지에는 운수, 여행, 통신, 보험, 사업, 정보, 기타서비스 및 특허권 등 8개 분야로 나뉘고 있지만 최근에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과 한류 등과 같은 문화산업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음반 및 공연 수입·드라마·영화 등과 같은 영상분야, 관광 수입 등은 국내 서비스수지에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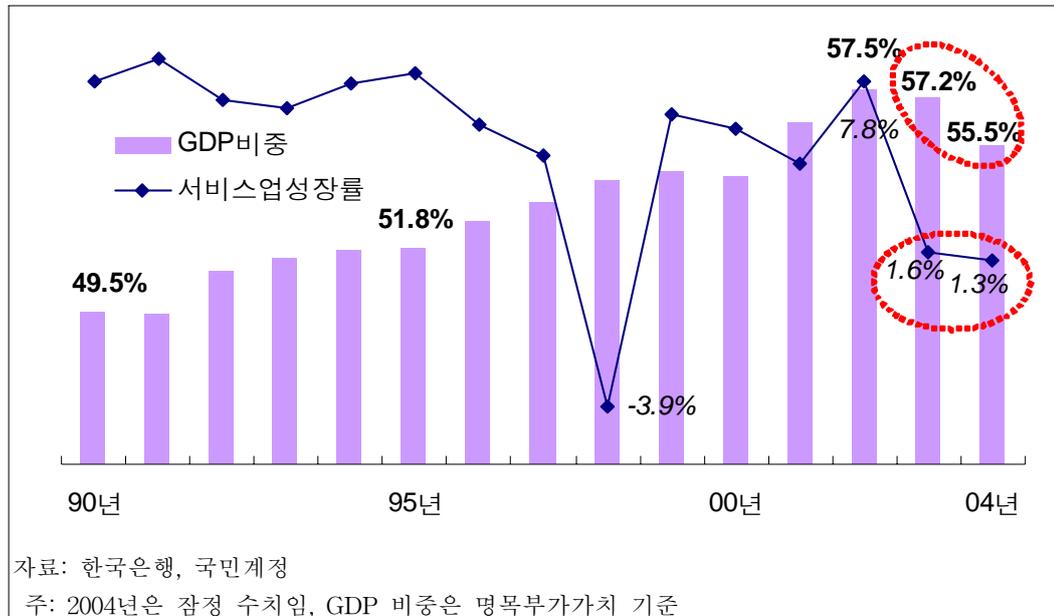
<표 3-47> 서비스업 업종별 특징

업종	주요특징
도소매, 음식·숙박, 공공행정 등 전통 서비스 업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 금융, 통신·방송, 문화·관광	성장잠재력 높음
비즈니스서비스, 물류, 금융, 교육, 통신·방송 등	제조업 등 국가경제의 효율성 제고
비즈니스 서비스, 교통·운수, 관광 등	글로벌 교역 등 국제화 용이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5년)

- 최근 한국은행은 서비스 수지 통계를 현행 11개 표준항목 17개 세부 항목에서, 11개 표준항목 59개 세부항목으로 대폭 세분화 하였음. 이에 따라 현행 일반여행, 어학연수로 구분되던 것이 업무여행과 업무외 여행으로 나뉘고 사업 서비스 항목의 세부항목인 기타 산업기술 전문서비스도 법률서비스, 회계 감사 및 세무컨설팅 서비스, 경영컨설팅 및 홍보 서비스 등으로 더욱 세분화 하였음.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항목은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와 기타 개인·문화 및 오락서비스로 분류하고, 기타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는 다시 교육, 보건, 기타서비스로 재분류하였음. 한국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를 줄이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열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4년 기준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 고용비중은 64.4%로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79%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기준의 서비스업의 GDP비중은 <그림 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 54.5%, 2003년 54.6%로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고, 2004년에는 오히려 52.8%로 떨어져 경제발전에 따라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는 선진경제의 특징에 잘 부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그림 3-1> 서비스업 GDP 비중 및 성장률 추이 (1990~2004년)

-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서는 매우 취약한데 통신,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자원부(2005년)자료에 의하면 GDP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20.3%로 미국 34.1%, 영국 32.9%과 독일 30.2%(2002년기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국내시장의 경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지식기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을 앞세운 외국계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는데 컨설팅 산업은 외국계 회사가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시장 조사업도 우리나라 상위 3개사가 모두 외국계 회사임
- 한국 서비스업 총산출은 2000년 335.7조원에서 2005년 407조원으로 연평균 3.5% 성장하였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8.0%에서 2005년

56.4%로 오히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8> 국내 서비스산업 총산출 현황

(단위: 조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서비스업 ¹⁾	335.7 (58.0)	352.6 (58.7)	377.9 (58.8)	387.5 (58.5)	395.7 (57.0)	407.0 (56.4)	4.2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13.2 (2.3)	14.2 (2.3)	15.3 (2.2)	16.0 (2.2)	17.0 (2.2)	18.4 (2.3)	7.9
건설업	42.9 (7.4)	45.3 (7.3)	46.5 (6.8)	50.5 (7.0)	51.5 (6.6)	51.5 (6.4)	4.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6 (9.6)	58.1 (9.3)	61.3 (9.0)	59.6 (8.2)	59.5 (7.6)	60.8 (7.5)	1.9
운수·창고 및 통신업	36.1 (6.2)	41.5 (6.7)	45.3 (6.6)	47.5 (6.6)	50.8 (6.5)	52.9 (6.6)	9.3
금융보험업	35.3 (6.1)	38.2 (6.1)	46.6 (6.8)	46.9 (6.5)	46.2 (5.9)	48.3 (6.0)	7.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68.1 (11.8)	68.4 (11.0)	71.7 (10.5)	73.2 (10.1)	74.7 (9.6)	76.6 (9.5)	2.5
공공행정 및 국방	29.1 (5.0)	29.6 (4.8)	30.3 (4.4)	31.2 (4.3)	31.8 (4.1)	32.7 (4.0)	2.5
교육서비스업	25.7 (4.4)	26.9 (4.3)	28.1 (4.1)	29.2 (4.0)	29.8 (3.8)	30.1 (3.7)	3.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2.6 (2.2)	12.0 (1.9)	12.7 (1.8)	13.3 (1.8)	14.0 (1.8)	14.8 (1.8)	3.5
기타 서비스업	17.2 (3.0)	18.3 (2.9)	19.9 (2.9)	20.2 (2.8)	20.4 (2.6)	20.9 (2.6)	4.3

주: 1) 서비스업에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포함

2) 괄호 안의 값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질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송영관(2006), “한·미 FTA의 영향 및 기대효과: 서비스 산업” 참조

○ 서비스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GDP 기준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9.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5%), 운수·창고 및 통신업(6.6%), 건설업(6.4%), 금융보험업(6.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2005년 동안의 서비스 업종별성장률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9.3%), 전기·가스·수도업(7.9%), 금융보험업(7.4%)이 높은 수준을 나타냄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분야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최근 휴대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 확대와 택배 및 물류업의 발달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3%에 달했으며, 금융보험업의 경우 금융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 증가, 신상품 개발 등으로 점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음
- 한편,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분류에서 제외되지만, GATS에서 서비스업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살펴보면, 2000~2005년 동안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연평균 7.9%의 높은 성장을 시현하였고, 건설업의 경우도 동 기간동안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한국의 경우 비중이 높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아 영세하고 주로 단기 일자리 중심의 생계형 창·취업에 편중됨
- 반면 기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운수, 통신, 금융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960년대 경제발전계획에서부터 한·미 FTA 체결 전까지도 경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용창출의 기여도 면에서 매우 열악함.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정부, 언론, 학계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경쟁력을 운운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형편임
- 특히, 고부가치 부문인 금융, 법률, 의료, 교육, 회계, 관광, 문화부문 등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국민경제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정부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단기처방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낡은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금융위기를 경험한 금융산업은 아직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국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교육서비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학연수나 유학경비로 인한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지대함. 의료나 관광의 경쟁력 역시 예외는 아님. 2000년 28억달러였던 서비스적자규모가 2005년 131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인 특허권사용료, 법률 및 컨설팅 부문인 기타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가 2005년 기준 약 74억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지적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역시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양국간 서비스 무역¹⁰⁾

- 한국은행에 의하면 2003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약 93.3억 달러, 서비스 수입은 약 126.7억 달러로 약 33.3억 달러의 서비스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표 3-49> 한미 서비스 무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총 서비스무역			對美 서비스무역		
		2000	2003	연평균 증가율	2000	2003	연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비중)	금액(비중)	
서비스전체	수출	30,534	32,957	2.6	9,269(30.4)	9,333(28.3)	0.2
	수입	33,381	40,381	6.6	12,060(36.1)	12,665(31.4)	1.6
	수지	-2,848	-7,424	37.6	-2,791(98.0)	-3,332(44.9)	6.1
운수	수출	13,687	17,180	7.9	3,569(26.1)	4,065(23.7)	4.4
	수입	11,048	13,613	7.2	3,543(32.1)	4,112(30.2)	5.1
	수지	2,639	3,567	10.6	26(1.0)	-47(-1.3)	-221.8
여행	수출	6,834	5,358	-7.8	1,068(15.6)	728(13.6)	-12.0
	수입	7,132	10,103	12.3	1,854(26.0)	2,170(21.5)	5.4
	수지	-298	-4,745	151.7	-786(263.8)	-1,442(30.4)	22.4
통신	수출	387	341	-4.1	173(44.7)	130(38.1)	-9.1
	수입	623	693	3.6	218(35.0)	210(30.3)	-1.2
	수지	-235	-352	14.4	-45(19.1)	-80(22.7)	21.1
보험	수출	68	34	-20.7	-3(-4.4)	-24(-70.6)	100.0
	수입	146	390	38.8	12(8.2)	39(10.0)	48.1
	수지	-78	-356	66.1	-15(19.2)	-63(17.7)	61.3
특허권	수출	688	1,311	24	38(5.5)	428(32.6)	124.2
	수입	3,221	3,570	3.5	1,913(59.4)	1,951(54.6)	0.7
	수지	-2,533	-2,259	-3.7	-1,875(74.0)	-1,523(67.4)	-6.7
사업서비스	수출	7,200	6,687	-2.4	3,421(47.5)	2,708(40.5)	-7.5
	수입	10,328	11,049	2.3	4,144(40.1)	3,788(34.3)	-2.9
	수지	-3,128	-4,362	11.7	-723(23.1)	-1,080(24.8)	14.3
정부서비스	수출	787	1,203	15.2	670(85.1)	1,033(85.9)	15.5
	수입	425	453	2.1	161(37.9)	161(35.5)	0.0
	수지	363	751	27.4	509(140.2)	872(116.1)	19.7
기타서비스	수출	881	842	-1.5	333(37.8)	265(31.5)	-7.3
	수입	459	510	3.6	215(46.8)	234(45.9)	2.9
	수지	422	332	-7.7	118(28.0)	31(9.3)	-36.0

주: 비중은 총서비스무역에서 대미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10) 송영관(2006), “미국의 서비스 무역장벽” (한·미 FTA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분야별 대미진출 확대전략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재인용

- 대미 서비스 무역이 총 서비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2003년 기준), 수출은 28.3%, 수입은 31.4%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은 한국 서비스 무역의 최대 상대국임. 또한 서비스 무역 적자의 44.9%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였음
- 2000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 무역이 확대되면서 미국과의 교역액은 증가(연평균 증가율은 수출이 0.2%, 수입이 1.6%)하였지만, 총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 서비스무역에서 대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2000년에 30.4%에서 2003년에는 28.3%로 감소하였고, 수입은 2000년에 36.1%에서 2003년에는 31.4%로 감소하였음

■ 전북의 서비스 산업

- 전북의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총부가가치는 14조 4,441억원으로 전국대비 2.9%를 점유하며 인구비중인 3.8%에 못 미치는 수준임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과 교육서비스업 분야는 전국대비 4.6~4.7%의 부가가치비중을 차지하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업종이고,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전국대비 1.9%를 점유하면서 비교열위에 놓여 있는 업종임
- 전북 서비스산업에서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기준 건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기/가스/수도사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의 서비스업종은 전북 내 서비스업 점유율은 낮은 편이나, 최근 10~20년 사이 크게 성장한 업종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표 3-50> 전북의 서비스 산업 현황

	총부가가치 (당해년가격)			종사자수			사업체수	
	백만원	전국비중	입지상	명	전국비중	입지상	개소	전국비중
서비스업 전체	14,444,130	2.9%		393,412	3.4%		109,108	3.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425,398	2.5%	0.84	2,675	4.0%	1.19	114	7.4%
건설업	2,412,415	3.6%	1.22	24,517	3.1%	0.93	3,345	3.7%
도소매업	1,073,987	2.1%	0.72	81,728	3.3%	0.99	34,289	4.0%
숙박및음식점업	525,472	2.7%	0.93	55,490	3.3%	0.97	21,874	3.5%
운수업	741,568	2.3%	0.79	26,867	3.0%	0.90	11,801	3.5%
통신업	491,302	2.8%	0.95	5,994	4.3%	1.28	508	5.4%
금융보험업	1,429,416	2.4%	0.81	20,610	3.5%	1.03	1,392	4.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753,995	1.9%	0.64	24,186	1.6%	0.49	5,028	2.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2,193,506	4.7%	1.61	27,014	5.0%	1.48	906	7.2%
교육서비스업	1,911,939	4.6%	1.56	51,715	4.3%	1.28	5,909	4.6%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66,643	3.8%	1.32	26,871	4.1%	1.23	3,160	4.2%
기타서비스업	718,489	2.6%	0.91	45,745	3.8%	1.13	20,782	4.3%

자료: 통계청(KOSIS), 2005년 말 당해년도 가격기준

<표 3-51> 전북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 변화추이

	1985년			1995년			2005년		
	백만원	전북비중	입지상	백만원	전북비중	입지상	백만원	전북비중	입지상
서비스업 전체	3,886,913	100.0%		9,565,370	100.0%		12,188,923	100.0%	
전기,가스및수도사업	51,284	1.3%	0.53	173,966	1.8%	0.59	414,039	3.4%	0.75
건설업	414,217	10.7%	0.81	1,944,316	20.3%	1.28	1,908,429	15.7%	1.23
도소매업	263,578	6.8%	0.53	852,667	8.9%	0.77	918,224	7.5%	0.71
숙박및음식점업	265,559	6.8%	1.62	411,797	4.3%	0.93	486,304	4.0%	1.00
운수업	261,170	6.7%	0.82	528,645	5.5%	0.80	705,682	5.8%	0.84
통신업	23,668	0.6%	0.78	178,422	1.9%	0.85	642,701	5.3%	0.98
금융보험업	112,858	2.9%	0.50	666,237	7.0%	0.69	1,126,422	9.2%	0.82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525,584	13.5%	0.81	1,319,398	13.8%	0.70	1,631,785	13.4%	0.68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746,330	19.2%	1.36	1,181,708	12.4%	1.49	1,719,763	14.1%	1.66
교육서비스업	805,784	20.7%	1.64	1,247,367	13.0%	1.51	1,479,135	12.1%	1.5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49,358	6.4%	1.49	505,942	5.3%	1.49	523,456	4.3%	1.37
기타서비스업	167,523	4.3%	0.89	554,905	5.8%	1.06	632,983	5.2%	0.93

자료: 통계청(KOSIS), 기준년도(2000년) 가격기준

■ 서비스 분야의 거시경제적 효과

<표 3-52> 한·미 FTA의 서비스부문 경제적 효과

구 분	CGE 정태모형 (KIEP)		CGE 자본축적모형 (KIEP)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생 산	1.95% (9.4조원)	0.31% (2.1조원)	3.24% (15.9조원)	0.49% (3.3조원)	7.1% (34.7조원)
고 용	1.52% (171천명)	0.45% (50천명)	2.57% (289천명)	0.69% (78천명)	3.9% (435천명)

주: 1) 시나리오 I 은 농업(80% 개방)과 제조업(100% 개방)의 시장 개방에 서비스부문 교역장벽 20% 완화. 시나리오 II 는 서비스부문의 교역장벽만 50% 완화.

2) KIEP 정태모형과 KIEP 자본축적모형중 시나리오 I 과 II 는 모두 생산성 증대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결과임. 이때, 생산은 CGE 결과를 우리나라 산업연관표(한국은행)에 적용하여 재계산한 수치이며, 고용은 이 결과를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생산증대에 따른 취업자수의 변화를 계산한 것임 (생산 및 고용효과는 전후방 파급효과까지 포함되어 있음).

3) 생산성증대 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쌀을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결과임.

-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원의 경제적효과 분석결과를 인용
 - 시나리오 I은 농업(80% 개방)과 제조업(100% 개방)의 시장개방을 모두 포함해서 서비스부문의 교역장벽을 20% 인하하는 경우
 - 시나리오 II 는 농업과 제조업의 시장개방 없이 서비스부문의 교역장벽 만을 50% 인하하는 경우를 가정
- 생산성 증대 효과는 자본축적모형의 시나리오 I 에 추가로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증가를 가정한 것임
- 생산 및 고용측면에서 시나리오 I 의 분석 결과가 시나리오 II 의 경우 보다 한·미 FTA에 의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서비스부문 뿐만 아니라 농업과 제조업의 시장개방을 통해 서비스부문과 제조업(또는 농업)부문간의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 특히, 서비스가 제조업의 중간재로 투입됨에 따라 제조업의 총산출과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서비스부문의 총산출과 고용을 증대시킴
- 모든 부문의 개방을 전제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할 경우(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 서비스부문의 생산은 7.1%(34.5조원), 고용은 3.9%(435천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CGE모형에 투입된 서비스부문의 무역통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CGE모형에 서비스부문을 포함시켰을 경우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하고 서비스 교역장벽은 국경에서의 관세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규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수량화하여 CGE모형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기초로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측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측면에서 종사자 비중을 고려하여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53> 전북 서비스부문 경제적 효과

구 분	CGE 정태모형 (KIEP)		CGE 자본축적모형 (KIEP)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생 산	1.95% (2,726억 원)	0.31% (609억 원)	3.24% (4,611억 원)	0.49% (957억 원)	7.1% (1조 63억 원)
고 용	1.52% (5,814명)	0.45% (1,700 명)	2.57% (9,826명)	0.69% (2,652명)	3.9% (14,790명)

- 모형에 따르면, 전북 제조업의 생산 측면에서 증가액은 609억 원~1조 63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고용 측면에서 증가 인원규모는 1,700명~14,79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서비스 부문별 쟁점사항

- 미국과의 FTA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큰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산업은 서비스산업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GDP 비중이나 고용비중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생산성이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정부는 미국과의 FTA가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서비스업체들의 퇴출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인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생산과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서비스 무역은 상품 등의 무역과는 상이하게 국경 간 거래를 포함하여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및 자연인의 이동 등 다양한 형태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개방 정도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 한미FTA는 국경 간 거래와 해외직접투자로 들어오는 상업적 주재에 의한 시장접근 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1) 금융

- 개방방식의 문제
 - 미국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는 반면, 한국은 싱가포르, EFTA와의 FTA에서 GATS 방식을 채택함
- 국경간거래 허용의 범위 문제
 - 미국이 체결한 기존의 FTA 협정문을 보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는 전반적으로 모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대부분 해상보험, 운송보험, 재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과 투자자문서비스만 포함되고 있음
 - 현행 국내법상 국경간 거래가 허용된 분야는 선박보험, 항공보험, 수출입적하보험, 재보험, 여행자보험, 장기상해보험, 개인 생명보험, 투자자문 등이 있음
 - 생명보험, 장기상해·여행자·선박보험의 국경간거래, 투자자문업의 국경간 거래는 현재 국내법에는 개방되어 있으나 WTO 양허표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
 - 따라서 미국이 칠레, 호주 등과 체결한 기존의 FTA 협정문 수준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요구해 온다면 그 영향은 현재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정문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 등을 협정문에 포함할 경우에는 국내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은행예금대출업무의 국경간공급은 미국도 개방하지 않고 있음

○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허용의 범위 문제

- 신금융서비스는 한 회원국에서는 제공되지만 다른 회원국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금융서비스로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FTA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이 기체결한 FTA를 근거로 할 때, 미국은 기존 규제의 틀에서 가능한, 자국법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요청할 것임

- 미국의 기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신금융서비스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시간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주어야 하고 거부는 건전성만을 이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는 첨단 금융상품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금융상품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규제의 투명성 문제

- 규제의 투명성이란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금융시장접근과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와 정책의 투명성을 의미함

- 투명성제고 조치로는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내용은 늦어도 적용되기 전에 공표되어야 한다는 것과 새롭게 도입될 규제내용에 대하여 적용관계자나 상대국이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함

(2) 통신

○ 미국은 한국에 기술중립성 문제와 기간통신사업자 49% 지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통신사업자는 통신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어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 넘어가면 국방·안보망의 보완성 침해 가능성이 잠재하고 또한 단기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설비투자 감소 등 통신산업 발전 저해가 예상된다
- 통신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가 정부의 지분 보유, 외국인 지분 제한, 외국인 경영참여 제한 등을 통해 자국 통신주권을 보호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도 유선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지분제한이 없으나 이동통신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통신사를 직접 소유할 수 없음
 -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를 대표하는 자
 - 미국시민이 아닌 자
 - 미국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법인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
 - * 미국시민이 아닌 자나 외국정부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의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미국법인의 경우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가능

(3) 법률

- 미국은 미국로펌의 국내 로펌과의 동업이나 국내 변호사의 고용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임
 -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한국 국적보유자에게 적용되는 동일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였음
 - 한국정부는 또한 1997년에 법률부문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개정하였음
 - 그러나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어떤 개인도 한국인과 한국내 외국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할 수 없으며 한국 내에 법률회사 혹은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
- 한국 경제의 중추돌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필요하지만, 법률서비스 개방으로 인해 한정된 국내 법률가 중 우수한 인재들이 자본력 있는 외국 로펌에 고용됨으로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질이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 필요
 - 개인은 국내법 분야의 법무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는 통상 국내 법률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용하는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4) 특급배달

- 미국은 DDA에서 특급배달서비스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에 본 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특급배달서비스는 현재 우체국 업무와 중첩되지 않는 서비스로 국내 택배 서비스가 포함됨
 - 우리나라는 현재 특급배달서비스에 대한 사업자허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운송사업 허가를 얻는 것으로 특급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신규 사업자 허가는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에 의해 발급함
 - Fedex가 소비자에게 직접 수하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국내도로 화물운송시장(cabotage)은 외국인지분 제한은 없지만 양허되어 있지 않음

(5) 해운

- 미국은 국제해상운송의 경우 큰 제한이 없으나 국내해상운송은 Jones Act라 일컫는 Merchant Marine Act of 1920의 Section 27에 의해 외국선박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 한국이 이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Jones Act에 의해 미국국내해상운송(미국항간의 운송)이 허가되는 선박은 1)미국에서 제작되고 2)미국에서 등록되고 3)미국법인에 의해 소유되고 4)선원의 75%이상이 미국국민이어야 함
 - 국내여객수송의 경우도 Passenger Vessel Services Act of 1886에 의해 비슷한 제약을 받음
 - * 외국회사가 미국에 해운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됨
 - 미국 국내해운의 규모는 2003년의 경우 9.2억톤을 초과함
- 한국의 경우 2000년의 경우 수출입물동량이 5.3억톤임
 -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 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lic Resolution No. 17)는 미국의 정부기관(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미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차관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음
- 1936년 미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 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사화물은 미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 상에는 잉여농산물 등 외국 원조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1920년 미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은 모든 미 국내화물(屬領, 자치령 포함)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승선한 미 국적선박에 의해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1995년 알라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 은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적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항공

- 미국의 국내항공서비스는 오직 미국항공사에게만 허용이 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도 한국이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분야임
 - 미국항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미국시민의 실질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함.
 - 미국항공사의 외국지분은 의결지분의 25%까지만 허용됨.
 - 대표 및 적어도 이사진 및 다른 관리자(managing officers)의 2/3이상이 미국 시민이어야 함.
 - * 그러나 1990년대 초 Northwest에 대한 KLM의 지분참여에서 볼 수 있듯,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외국인이 25%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 49%까지 지분을 허용하기도 함. 단, 이 경우도 1) 미국인이 실질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외국인의 모국과

미국 간 open-skies 협정이 존재하여야 함.

- 또한 미국 국내여객기와 국내화물수송기의 승무원은 반드시 미국국민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
- 미국항공기에 대한 항공기의 wet lease*는 미국법인이나 미국시민에게만 허용됨

* wet lease: 완비된 항공기의 임대를 말하는 것으로 적어도 한명의 조종사와 승무원, 보험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 서비스 부문 기대 효과

-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여, 제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해 제조업의 단순생산공정이 임금이 싼 후발개도국에 이전되면서 국내의 저임금에 기초한 공산품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산업구조는 IT,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종과 금융, 통신 및 지식기반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주가 되는 구조이어야 할 것임
- 한국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이며 이것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소득이 연 8천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가격경쟁이 치열한 제조업종의 경우 이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산업구조는 이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여야 함
- 한국의 대부분의 서비스분야는 일본, 미국 및 EU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 및 여타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국민경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한·미 FTA를 통한 FDI의 활성화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수요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한·미FTA를 통한 시장과 경쟁의 확대는 현재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 금융, 방송(케이블), 운수 서비스 등을 더욱 발전시킬 것임

산업별 대응방안

IV

- 1 농업 부문 대응방안
- 2 제조업 부문 대응방안
- 3 서비스업 부문 대응방안

제4장 산업별 대응방안

제1절 농업 부문 대응방안

1. 피해구제 대책

■ 기본방향

- 농업피해조사 전담기구의 신설과 품목별, 농가별 피해 규모에 대한 세밀한 조사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함
- 농림부의 피해구제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전북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가등록제 조속 실시 : 농가소득, 농업인 연령, 농사규모 등의 조사 및 등록 후 농가 유형별 분류에 따른 지원대책 수립
 - 현재의 품목별 직접지불제를 농가 단위의 직접직불제로 전환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 도입

■ 지원대책

- 피해보상제도의 체계화
 - 농업부문의 피해 산정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피해조사 전담기구 설치 필요
 - 한편 여타 지원제도와의 정합성 문제를 고려
 - 실질적인 농가소득 피해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보상과 사후보상으로 구분하는 정책 병행
- 피해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대책
 - 현재 확보하고 있는 FTA이행지원기금 이외에 농촌사회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함
 - 농촌사회안정화 기금은 정부지원금 + 도 보조금 + 농업인소득 일정액(자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적립한 후 농가 소득보전에 사용
- 맞춤형 농정에 따른 지원 : 농가소득에 따른 지원차등화

- 미국산 농산물수입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 감소분 보전
 - 피해 보상과 함께 소득하위 농가 및 영세농, 고령농업인은 보상기간을 통해 구조조정 실시
- 전업교육 및 사회보장차원의 지원대책 확대
- 농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농업생산의 감소는 농업인의 탈농을 유도할 것이지만, 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어렵기 때문에 탈농가의 가족은 도시빈민화 되기 쉬우며 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임
 - 노동가능 인력에 대해서는 전업교육 실시와 직업알선 등으로 구제하고, 고령농업인은 사회복지보장의 차원에서 해결모색

2. 대응방안

■ 한·미 FTA가 전북 농업에 주는 시사점

- 거대한 농업 선진국인 미국과 한국간의 FTA는 축산물, 과일, 채소, 곡물 등 우리의 거의 모든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칠레 FTA에서는 포도 복숭아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피해가 예상되었던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
 - 양병우의 분석에 의하면, 한-미 FTA가 전북농업에 미치는 피해액을 부문별로 보면 축산물, 미곡, 채소.과일의 순위로 나타남. 축산물이 972억원, 미곡이 328억원, 채소.과일이 235억원의 생산액이 후생손실로 나타남. 한-미 FTA 영향은 미국 농산물과 경합이 심한 농산물일수록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임. 경쟁력이 낮더라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에 걸쳐 관세가 소폭 인하되면 피해는 줄어들 수 있음
-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전제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낮으나 피해가 큰 다른 품목농가가 쌀 생산에 전환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임
 - 전북이 다른 도에 비해 축산, 채소.과일의 생산 비중이 낮아 비교적 타 지역보다 피해가 작으나 해당 품목의 농가는 직.간접 피해 영향을 받을 것임. 전북의 한육우 농가는 2000년 16,215호, 닭 사육농가는 15,093호, 과수 재배

농가는 4,000호에 이릅니다

- 쇠고기의 협상결과에 따라 축산의 영향은 다르겠지만, 쇠고기 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될 경우 비육우를 비롯한 사육농가는 직접적인 피해 예상
 - 또한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비도 감소하여 이들 농가도 간접적 피해를 입음. 국산 축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차별적 프리미엄이 없다면 축산농가의 타격은 더욱 커지게 됨
- 과일의 경우 우선 오렌지의 수입증가가 이루어지면 국내 과일농가의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
 - 현재 관세가 50%인 오렌지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가격이 33%정도 인하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오렌지를 더 소비하게 되고 사과, 배, 복숭아 등 국내 과일 소비를 감소시켜, 이는 국내 과일 하락으로 이어져 이들 농가의 피해로 나타남. 사과, 배, 복숭아 등 신선과일은 식물 검역상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어려울 것이나, 만약 이들까지도 수입된다면 과수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전북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쌀임. 우리나라 전체의 논벼 재배농가의 비중이 56.9%(2002년 기준)임에 비하여 전북의 논벼 재배농가의 비중은 72.3%로써 전북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쌀의 협상결과가 전북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 쌀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타 작목의 재배농가가 쌀 재배로 전환함으로써 쌀 가격이 하락하고 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20,000톤 가량의 쌀 수입을 늘려 2014년까지 40만 8천 7백톤으로 늘리게 됨. 이에 더하여 한미 FTA에 의해 피해가 큰 작목의 농가들이 쌀로 작목 전환을 한다면 쌀시장의 과잉공급과 쌀 가격 하락은 심각성을 낳을 수 있음. 이는 또한 소비자의 선택을 얻기 위해 치열한 품질경쟁과 브랜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
- 권오복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FTA가 체결되면 연령층이 낮을수록,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FTA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의 경우 30세이상 40세미만의 젊은 농업경영주 비율이 20.6%로써 전국의 6.0%에 비하면 월등히 높음. 젊은 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북의 농업발전에 긍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FTA의 영향으로 이들의 피해가 더

육 커질 우려도 있다고 보여짐

■ 전북 농정의 대응 방향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미 FTA는 한-칠레 FTA를 비롯한 다른 FTA에 비하여 농업부문에 대해서 훨씬 전북 농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특히 영농 규모가 크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피해가 크며 고소득 농가일수록 피해가 더 크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쌀 중심의 전북 농업은 협상대상에 쌀을 포함시킬 경우 예상되는 쌀 값 하락은 전북 농업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도 쌀 이외의 작목 재배농민이 쌀을 집중 재배함으로써 쌀 생산과잉으로 인한 쌀값하락은 여전히 전북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전북 농업은 쌀 편중 농업에서 탈피하여 작목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한-미간 쌀 가격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비가격경쟁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전북 농업의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 농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쌀 편중 농업에서 작목의 다양화

- 전북 농업의 쌀 의존도를 완화하여 작목 다양화 정책 필요
 - 쌀 편중 농업은 쌀 작황과 가격에 따라 전북 농업의 변동이 심하게 영향을 받음. 한-미 FTA에서도 미국 측은 쌀을 협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WTO/DDA 협상에서도 쌀은 2014년 이후 관세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전북지역에서 농가소득원을 쌀 중심에서 다른 작목으로 보다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목별 10a당 소득 순위에서 쌀은 20위권을 벗어나고 있음(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2003). 쌀보다 10배가 넘는 높은 소득을 얻는 고소득 작목은 축성 가지나 시설고추, 들깨있

등으로 나타남. 이외에 부추, 미나리 등이 높은 소득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축성재배나 시설재배 등 작형을 변형시킨 작물재배는 쌀보다 높은 소득을 올려 줄 수 있음

- 문제는 많은 농민이 일부 품목에 집중될 경우 그 품목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우려되므로 전북 농정당국은 지역적으로 작목재배를 조정하고 농민들의 설득이 필요

○ 특히 전북은 향후 조성될 새만금지구의 영농단지에 대체작목 재배 필요

- 새만금지구에 재배할 대체작목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과 연관된 작목 선정
- 최근 자원 및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2005년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바이오에너지가 세계 경제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부각.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산업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함에 따라 월스트리트의 자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목재,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등을 사용하는 에너지)와 바이오 연료(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로 구분됨. 그러나 대부분의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취급이 불편하고 경제성이 낮아 바이오매스 에너지보다는 바이오 연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주로 농산물이나 농업 부산물에서 2차 가공되어 만들어지는 바이오연료는 향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차량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 고용창출효과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됨. 더욱이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성을 제고시켜 화석연료의 대체가능성을 높임. 바이오에너지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에 비해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의 성장과정에서 흡수, 고정되어 순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로 인정 받는 추세임
- 전북의 새만금지구에서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작물 생산을 통해 농업의 의미를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명.에너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쌀 편중 농업을 완화하고 농가소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세계적으로 바이오 디젤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유지는 콩, 유채, 해바라기, 쌀겨, 팜, 코코넛, 야자수 등으로서 이 중에서 유채는 기름함량도 높고 올레인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새만금간척지에는 내염성을 가지면서 바이오 디젤 생산이 가능한 유채 재배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새만금지구의 경관유지에도 도움을 주어 관광객 유치 증대와 이를 통한 농산물 판매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2) 품질차별화와 마케팅 전략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 수입농산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와 마케팅 전략 등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유통체계의 확립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창동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쌀이 2002년 1월 총 27개에서 2003년 1월 48개, 2004년 1월 47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가진 양질미는 일반미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브랜드 쌀 중에서도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가 큼. 가격 상승이 가장 현저한 브랜드 쌀은 「장호원임금님표」의 2002년 47,000원(20kg 포장 쌀), 2003년 54,000원, 2004년 55,500원으로 동기간 18.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거래되는 쌀 주요 브랜드별 판매가격의 최저수준과 최고수준의 가격차가 12,800원(2002년), 14,000원(2003년), 15,500원(2004년)으로 커지고 있음(박평식 외, 2005).
-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국산쌀과 외국쌀의 가격경쟁이 심화될수록 비가격(非價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 노력이 더욱 요구되어짐. 그러므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후 저장, 가공 단계까지의 품질관리와 상표, 서비스, 광고 등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과제임
-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제고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향을 보면 2003년도 서울지역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지불의향 가격수준을 조사한 결과, 관행재배 농산물 가격 대비 무농약재배는 34.4%, 유기재배는 48.1% 정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병서 외, 농산물 상품성 제고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2003). 그리고 2004년도 서울, 부산, 대전, 광주지역 거주 400가구를 대상으로 청과류 중심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불의향 가격을 조사한 결과, 관

행농산물 대비 무농약농산물 120.2%, 유기농산물 142.7% 등으로 나타남(이계임 외,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경쟁력은 가격경쟁력 뿐 아니라 품질경쟁력도 있고 브랜드를 포함한 마케팅 경쟁력이 있음. 시장개방에 따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품질에서 보강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마케팅으로 보강하는 이른바 종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중요함

(3) 농업생산과 식품산업 등의 연계강화

- 한-미 FTA 등의 여파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하나로 식품산업 등을 육성하여 농업생산부문과 적극 연계시키는 방안
 - 전북의 식품산업은 국내 타 지역에 비하여 그 제조업체 수나 생산량 면에서 볼 때, 이 지역 전체 제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함. 전북은 식품원료를 공급하는 농업부문과 식품제조업의 연계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식품업체가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제품개발 능력, 가공 설비, 시험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전국의 매출 상위 20개사 중에서 전북지역에서는 4개 사업장만이 속해 있음
 - 그러므로 가공 시설 및 장비를 근대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학.관.연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농업과 식품업을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 전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농업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특성을 살리고 이를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1차 산물을 고부가가치 2차 상품화할 수 있는 R&D 인력 보강 및 마케팅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제시가 필요함
- 최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분석해 보면, 식품의 안전성, 건강 기능성, 웰빙 식품, 신선편이, 감성소비 등에 대해 욕구가 높아짐을 볼 수 있음. 만성질환의 발생 억제, 건강지향적 소비자 욕구 증대에 따라 식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식품의 경우 한류 열풍과 교민을 중심으로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기능성 식품 및 전통식품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음
- 우리의 전통발효식품이나 고구마, 단호박, 감자, 보리밥 등이 웰빙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이들 식품에 전북의 관심이 모여져야 할 것임. 또한 신선 편이 식품에 소비자의 관심이 있게 되므로 신선 과채류도 육성되어야 함. 이들 신선 과채류는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가지는 가공이 아니라 편이성만을 높이기 위해 최소로 손질한 가공품이어야 하고 감성 소비의 경향에 맞춰 천연향이나 천연색소의 활용 및 식품의 모양과 디자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선 과채류에서는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축산물에도 유해성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쓴 제품이 나올수 있게 생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전북에서는 식품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추세와 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식품과 전통식품의 차별화를 추진하되, 이들 식품산업이 도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이 지역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농산물 틈새시장 개발과 수출 확대

- 한-미 FTA 등의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 및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농산물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틈새시장(niche market) 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영농규모가 확대가 힘든 중소농들에게는 틈새시장 공략이 매우 중요
 - 틈새시장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기호와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소비계층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
- 미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소비패턴의 차이가 크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계절적으로 특정품목의 수요가 증가함. 이에 수출유망 품목으로 지역적,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수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으로 수출가능한 품목으로 라면, 과자류, 국수류, 인삼제품, 장류, 차류, 김치 등이 있음. 이들 품목에 대한 포장개선, 마케팅 지원, 홍보 등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깻잎, 단감, 호박 등 틈새품목의 수출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
 - 최근 미국의 한국 식당과 식품점에는 한인을 비롯하여 아시아, 남미, 흑인 등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식메뉴의 개발이나

건강과 기능성을 고려하고 현지인의 입맛에 부합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 수출하는 방안을 농산물 생산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미국 외에 우리 주위에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 일본이 가까이 있고 고도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대만, 홍콩, 러시아 등 잠재적인 시장이 있음. 수출 과채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에 성공한 파프리카의 경우 목표시장은 1차적으로 일본이었으나, 향후 2차 시장으로 동남아 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또한 과채류 중에서 수출유망품목이라 할 수 있는 멜론의 목표시장도 우선 일본시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멜론 등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여 당해 품목의 생산자단체(품목협동조합 등)를 육성하여 생산자들이 투자하여 수출업체를 만들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리하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임
- 목표시장 내지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기에 앞서 생산, 기술, 판매, 입지여건 등 현재의 경쟁력 수준을 엄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경영비 절감, 품질관리, 마케팅 등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특히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품개발을 위한 시장조사와 기술개발, 경영위험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함.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상품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5) 농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쌀을 비롯한 중요한 품목의 생산, 유통 등에서 공동대응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므로 공동마케팅 조직 등 조직화된 힘을 모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
 - 이를 위해서는 농업혁신을 이끌어갈 지역농업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들이 해결하기 힘든 전략 품목 개발, 초기 시설투자, 생산자조직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제2절 제조업 부문 대응방안

1. 피해구제대책

■ 산업피해구제 담당기관으로서 전북무역위원회(가칭) 신설

- 지역차원에서 무역구제와 관련한 법안의 검토 및 담당 일원화, 중앙 무역위원회의 기능보완
-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근로자 전직, 재취업 지원,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담당
-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채용

■ 고용유지 지원금 확보 및 지원

-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제조업부문에서는 산업별, 혹은 기업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을 것임
-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보 및 지원을 기업경영의 안전성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으로 인해 실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
 - 구직상담, 고용정보 제공 등과 함께 재고용 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재취업의 지원과 개인별로 특화된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 보상체계 및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

-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에 근거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환경 정보제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확대
- 개방화에 대한 제조업부문의 기업피해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및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반구축

2. 대응방안

■ 기본방향

- 한·미 FTA의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함
 - 한미FTA의 기대효과로서 양국시장접근의 확대와 안정적 시장확보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능동적 대응 절실히 필요.
 - 즉 미국시장과 소비자 특성에 대한 조사 분석, 소비패턴에 부응한 신속한 제품개발과 기능개선, 중소기업의 미국진출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현지 물류 및 마케팅 지원 등 전략적 접근 필요
- 한·미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이 실제로 우리 전북 경제에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미 FTA협상 타결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산업부문별, 단계별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상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전라북도는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양국가 간의 상호호혜적 관점과 각 산업별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하며, 이해당사자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이는 이미 전북 도내에 진출한 외국계 부품소재기업과 최종재 조립업체, 국내 생산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한·미 FTA 협상의 전라북도 제조업부문 대응방향

- 새로운 산업여건 조성
 -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예상되는 제도변화와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향 후 우리 전라북도 제조업의 재도약과 고부가가치화를 가능케하는 새로운 산업여건 조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임
 - 전라북도 내 산업보호 위주의 대응전략에서 탈피하고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미국 및 우리나라의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상호 보완성에 기초한 산업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글로벌 시장인 미국을 기반으로 전라북도 제조업의 활로를 찾는 적극적이고 공세

적인 대응방향을 찾아야 함

○ 부문별 대응전략

- 전라북도 제조업부문에서 한미 FTA협상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료 및 화학제품 부문은 틈새시장을 찾아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전라북도의 3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품산업 경우 미국상품과 비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을 찾아 제품특화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한편 제품별 관세율 적용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향후 각각에 대한 실제적 조사를 통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전라북도 제조업부문에서 한미 FTA협상으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봉제의류 및 자동차부문은 가격경쟁 이외에 기술경쟁력의 확보와 전방산업 부문의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특히 전라북도의 3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품소재산업(자동차)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야이지만 대미 경쟁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인력 교류와 R&D 협력프로그램 추진, 기술투자 유치 지원(동북아 허브화를 위해 R & D 센터의 유치), 기업간 협력기반 구축
- 한·미 FTA협상을 계기로 전라북도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및 역외국가로부터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 수립
 - 내수시장 활용형 : 대미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고기술 분야
 - 경쟁력 활용형 : 대미 비교우위 분야인 주력수출산업과 그 후방산업으로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Ex: 부품소재산업)
 - 동아시아 지역거점형 : 고기술 기계장비, 부품소재 등
- 한·미 FTA협상을 계기로 전라북도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들 사이의 경쟁구도를 이용한 투자경쟁환경 조성
 - 고기술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진출 전방위 지원 및 경쟁환경 조성
 -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담 투자유치 조직 구축
- 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활성화 대책 수립

- 중소기업은 전북 제조업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및 활성화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지원분야는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한미 산업기술 협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미국 정보조달시장 진출 및 참여 확대 등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현지 유통네트워크 구성 등 비가격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 및 일본에 치중된 중소기업의 대외거래를 미국으로 확장하도록 유도
- 미국 시장진출과 관련된 경험 전수 및 확산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중심의 포럼활성화나, 글로벌 모니터링 센터의 구축을 통해 중간재 부품 등 미국의 글로벌 구매수요 관련 정보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성 제고 등의 대책 마련

제3절 서비스업 부문 대응방안

■ 기본방향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이는 법과 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큰 제약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은 질 낮은 산업이라는 정부와 국민의 인식 역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국가 이미지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물론 고용창출의 주 산업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여야 함.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신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됨
-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부족한 편임.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절실함

■ 대응전략

(1)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 21C의 서비스산업구조는 융합추세의 발전과 더불어 관광, 교육, 문화, 레저 등의 서비스분야에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산업구조를 보임. 우리나라는 글로벌 서비스산업 관련 수요와 공급 부문에서 선진국에 근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 21C 서비스산업에 대비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서비스산업은 질 낮은 산업이라는 정부와 국민의 인식 역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서비스 마인드가 충만한 멀티폴 칼러(Multiple Color) 서비스인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따라서 정부와 전문가집단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2) 특성화 전략

-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글로벌 서비스산업 특성화전략 모델의 설정이 시급함. 글로벌 서비스사회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이 점차 다양해지고 국가별로 전략사업화 된다는 것임
- 아시아 각국은 서비스산업을 전략사업화 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경제 성장원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태국의 의료관광, 영국의 디자인산업, 독일의 전시산업, 필리핀의 외국인 은퇴유치산업, 호주의 교육산업, 그리고 뉴질랜드의 영화관광산업 역시 서비스산업 선진국가의 특성화 전략산업의 좋은 예임

(3) 개방과 규제완화

-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 서비스산업 전략시스템 확보에 힘써야 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과 규제완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됨
- 태국의 의료관광산업의 수출산업의 성공은 1967년 의료시장 개방 시 규제철폐와 법률시스템의 탄력화 때문에 가능하였음.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국공립 병원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 존재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음. 즉 개방과 규제철폐가 민간 병원의 경쟁력 토대가 되었음

(4)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서비스산업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함. 글로벌 서비스산업 시대에 요구되는 인력은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겸비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고기술과 고숙련이 필요한 고급 인력임.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 모두 우수한 서비스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완비해야 됨
- 태국의 대학교육 역시 20년 전부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전 과목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학부를 운영하며 글로벌 서비스산업 인력을 육성하고 있음.
태국의 의료관광사업의 성공은 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 하에 우수한 의료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국가의 국제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합리적이며 창조적인
인력에 좌우됨. 따라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선적
인 정책은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글로벌 서비스인력을 육성하는 교육시스
템을 갖추는 것임. 따라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이 이러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전환되어야 함

연구수행기관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 박성일 원장대행

연구진

연구책임 : 이승형 (연구위원)

연구진 : 형영주 (연구위원)

정책연구 자문위원

윤충원 (전북대학교 교수)

정안성 (전북대학교 교수)

정지영 (전북대학교 교수)

한미FTA 협상에 따른 전북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발행일 : 2007년 3월 31일

인쇄일 : 2007년 3월 31일

발행인 : 전라북도지사

발행처 : 전라북도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Tel. 063) 280-2114